

연구자료 D234-2 | 2007. 12.

농식품정책의 선진화를 위한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일러두기

우리 연구원은 곧 다가올 것으로 예상되는 농산물 시장의 완전 개방에 대응하고 선진국 단계의 농정 방향과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2년 과제로 「선진국형 농정으로의 전환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연구 첫해인 2007년에는 현실인식과 미래방향 선택에 중점을 두며 2년차에는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구체화 할 예정이다.

1차 연도 연구에서는 각 분야의 정책의 쟁점과 변화 전망, 정책방향 설정 등을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와 연구진이 진행하는 전문가 토론회를 운영하였다. 정책분야는 식품, 농지, 소득, 기술, 농촌개발 등 10개 분야로 나누었으며, 각 토론회에서는 3~4편의 논문을 발표하고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 자료집은 “농식품정책의 선진화를 위한 과제”를 주제로 핵심 이슈인 식품안전, 식품소비 및 영양정책, 식품산업 문제와 선진국 사례에 대해서 진행한 발제와 토론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이 자료집이 앞으로 진행될 관련 연구나 정책 수립 시에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목 차

토론회 요지 3

발표 논문 21

- | | | |
|--------------------------|-----|----|
| I. 식품산업정책의 평가와 과제 | 이정희 | 21 |
| II. 식품안전정책의 평가와 과제 | 최지현 | 43 |
| III. 식품소비 및 영양정책의 평가와 과제 | 김성용 | 65 |

종합 토론 81

토론회 개요

- 제 목: 농식품정책의 선진화를 위한 과제
- 일 시: 2007. 7. 30.(목), 15:00~18:00
- 장 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본관 대회의실

- 주제 발표 I: 이정희(중앙대학교 교수)
 - 식품산업정책의 평가와 과제
- 주제 발표 II: 최지현(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식품안전정책의 평가와 과제
- 주제 발표 III: 김성용(경상대학교 교수)
 - 식품소비 및 영양정책의 평가와 과제

- 지정토론
 - 사회: 박성재(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토론자: 전한영(농림부 소비안전과 사무관)
장남수(이화여자대학교 교수)
김병조(식품외식경제신문 편집장)
김태곤(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허운진(한국농촌경제연구원 초빙연구원)

토론회 요지

- | | |
|--------------------|----|
| 1. 농식품산업의 문제점 및 이슈 | 5 |
| 2. 발전방안 | 12 |

토론회 요지¹

1. 농식품산업의 문제점 및 이슈

1.1. 식품산업

- 그동안 정부의 정책은 식품안전을 중심으로 초점이 맞추어져 왔고 식품산업을 육성하기 보다는 규제하는 정책이 많았다. 그 결과 식품산업육성, 식품영양 부분이 식품안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떨어지게 되었다(그림 1 참조).
 - 식품산업진흥의 주관부처인 산업자원부에서는 식품관련 부처나 업무가 없으며 식품산업체를 대표하는 (사)한국식품공업협회는 식품위생법의 구속을 받는 법정단체이다.

- 식품산업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원료를 수입산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 식품산업에서 가공용으로 이용하는 원료뿐만 아니라 대형유통업체에서 취급하는 농산물을 주로 벤더에 의해 구입하고 있는데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수입산의 비중을 높이고 있는 추세이다(표 1 참조).
 - 실제로 2002년에 대형유통업체가 벤더업체를 통해 농산물을 공급받는

1 위 글은 “농식품정책의 선진화를 위한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전문가 초청 토론회의 발제논문 및 토론을 요약한 것임

비율은 4%였는데 2004년에는 40.7%까지 성장했다. 이를 통해 앞으로 국내 농산물의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특히 식품산업에서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외식서비스 분야의 경우, 프랜차이즈(Franchise) 산업차원에서는 산업자원부, 요식업의 위생관리차원에서는 보건복지부, 관광·문화적차원에서는 문화관광부가 주무 부처이다.
- 이와 같은 식품관련 행정의 다원체계는 부처 간의 의견충돌을 조정할 수 없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식품관련 행정력을 저하시키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그림 1. 기존 식품정책의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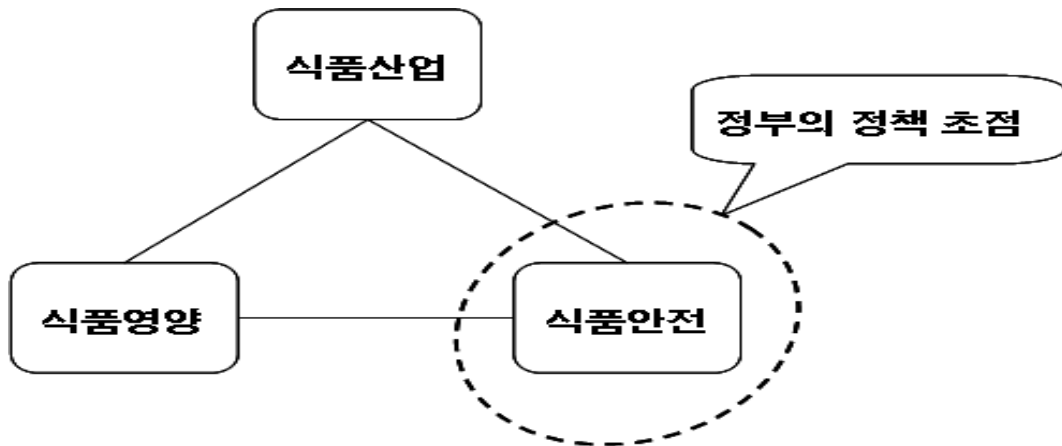


표 1. 대형유통업체의 구입처별 농산물 구입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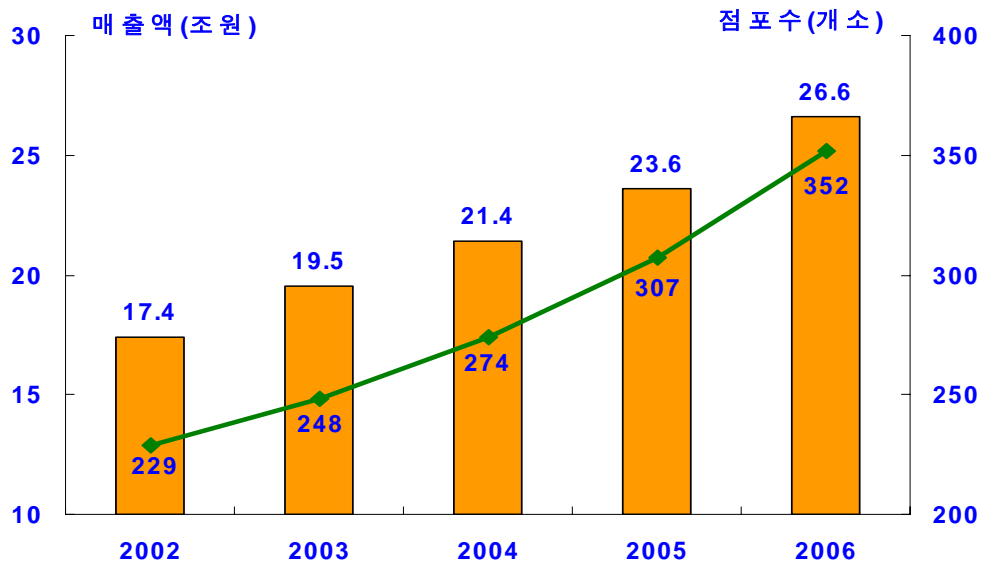
구분	산지직구입	도매시장	벤더업체	농협유통센터	기타	합계
2002년	46.4	54.6	2.0	-	-	100
2004년	36.9	17.5	40.7	4.4	0.6	100

자료: 황의식의, <산지유통 혁신전략과 농협의 역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4.

- 식품유통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중소유통업체와 재래시장이 대형 유통업체에 밀려 침체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박재홍, 2007).
 - 2006년 기준 우리나라 유통업계의 업체별 점유율 현황은 대형마트가 32.9%로 1위를 차지하여 전통적인 도매시장 및 재래시장, 백화점 중심에서 대형마트로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².
 - 대형마트의 시장규모도 2002년 229개 점포에서 17조원의 매출액을 기록하던 것이 2006년에는 352개소에 26조원으로 52%가량 성장하였다.
 - 이러한 대형마트의 성장과 더불어 농산물 취급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농산물시장에서의 대형마트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선진국들의 식품정책의 추세는 농업과 식품은 연계하여 관리하되 식품안전관리에 있어서 식품과 의약품은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림 2. 대형마트의 매출액 및 점포수 현황



자료: 하나금융경영연구소, 2006.

² 대형마트 32.9%, 백화점 26.5%, 인터넷 쇼핑몰 20.1%의 순임.

- 선진국에서는 농림부 명칭에 식품을 포함하는 추세이다. 덴마크는 식품의 품질과 안전성 및 식품산업 진흥을 포함하는 식품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조직으로 식품농수산부가 있다. 영국의 경우 환경식품농촌부가 신설되었으며 독일은 소비자보호·식품농업부에서 총괄하고 있다.
- 영국은 식품관련 국민건강과 소비자보호를 위한 식품규격청을 두고 있다. 또한 프랑스는 식품안전청에서 식품원료에서 가공, 유통 등 식품안전과 관련된 전 분야를 관장하는 기구를 설치하였다.

1.2. 식품영양

- 현행 식품위생법에는 소비자의 보호, 영양제공, 교육 및 홍보와 관련된 내용이 없고 단편적인 문제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는 지금까지 식품영양을 담당하는 전담연구부서도 없는 형편이다.
- 학교급식은 교육부가 담당하고, 저소득층, 여성 등의 영양문제는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는 등 영양과 관련한 정책은 농림부가 다른 기관에 비해 뒤떨어지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 국산 농식품 소비확대를 위한 홍보, 학교급식 지원, 한국형 식생활지침 개발과 같은 중요한 이슈가 대두됨에도 불구하고 학교우유급식을 제외한 관련사업의 예산 책정이 미흡하다(박성재 외, 2006).
- 선진국에서는 식품영양정책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들 식품영양대책은 국민 식생활개선 및 건강증진, 영양개선과 같은 직접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국내농산물의 소비 확대에 의한 농업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전(全)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식생활을 위한 홍보 대책

- 저소득가구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식품영양보조대책
- 공공부문의 식품조달정책과 학교급식 정책

1.3. 식품안전

-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대되는 것에 비해 정책적 대응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소비자들은 대체로 식품의 안전성을 중시하면서도 현행 제도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³.
 - GAP 및 이력추적제 사업과 관련한 민간인증제도가 확립되지 못해 인증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과제가 대두되었다.
 - 도축장의 경우, HACCP의 도입비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유통과정의 도입비율은 매우 낮다⁴.
- 각 기관별로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지만 정보의 교류가 활발하지 못하다.
 - 현재 각 기관별로 산지 생산농가의 5%를 샘플조사하고 있다. 또한 시중에서 유통하는 과정에서 안전성 관련 모니터링을 위해 안전성관리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그러나 기관 간의 정보교류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식품안전을 담당하는 기관별로 통계 및 기준이 각각 다른 것도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청이 2007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식품안전성과 관련하여 정부(34.1%)보다는 소비자단체(51.6%)와 언론기관(50.6%)을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식품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도 정부보다는 언론매체를 통해 얻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4 2006년 기준 도축장의 HACCP 도입비율은 81%인 반면, 식육을 가공, 포장하는 가공장은 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위생적으로 취약한 국가(중국, 동남아시아)로부터 수입되는 식품원료에 대한 안전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 2006년에 국립식물검역소에서 수입된 농산물에 대한 검사 후 폐기한 실적을 보면 중국은 미국에 비해 폐기된 건수는 작지만 수량은 3배 이상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표 2 참조).
 - 현행 식품안전 관리 기관들의 해외정보 수집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입농축산물의 안전성관리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친환경농산물의 차별적 유통이 부족하고 산지원료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농약이외의 중금속과 미생물에 대한 기준이 전무하다.
 - 단기간 내에 GAP 및 이력추적제 사업을 확장하면서 홍보가 부족하여 소비자의 인지도가 낮다. 또한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와 차별성이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 농산물에 대한 중금속과 미생물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부족한 문제가 있다. 현재 쌀, 고구마, 배추 등 10개 품목에만 납과 카드뮴 잔류기준이 설정되어 있을 뿐 미생물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은 없는 상태이다.

- 외식산업이 영세하기 때문에 위생관리능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또한 식품안전에 관련된 시민단체, 언론의 과민반응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경우가 많다.

표 2. 수입 국가별 농산물 검역실적(식물)

단위: 건, 개, %

국명	검사실적		폐기		폐기율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중국	4,086	78,243,953	272	1,167,973	6.7	1.5
인도네시아	730	3,018,861	52	23,160	7.1	0.8
미국	648	2,437,909	51	8,939	7.9	0.4

자료: 국립식물검역소, <검역연보>, 2006.

- 2006년 현재 인구 70명당 식당이 1개로 추산되고 있다. 이 중에서 1년 안에 폐업하는 비율이 70%나 되고 대부분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식품위생, 안전을 위한 장비나 의식 등이 부족한 실정이다.
- 선진국의 식품안전관리 동향은 이력추적제(Traceability)를 이용한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정책의 투명성 확보를 통해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 EU에서는 2005년부터 모든 식품에 대한 이력추적제를 실시토록 하여 생산부터 소비(Farm to table)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위해요소를 차단하고 식품안전을 통합 관리한다는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 식품안전관리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험관련 정보와 의사결정과정을 공개하고 이해당사자들 간에 공유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 및 계몽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 식품안전문제를 사후처방적인 대응에서 위험평가-위험관리-위험정보교환(Risk Assessment-Management-Communication)을 축으로 하는 위험분석체계에 의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USDA, FDA, 2000).
- 선진국에서는 소비자로부터 식품안전에 대한 신뢰를 얻기 위해 생산단계에서 소비단계에 이르는 행정을 특정기구에 집중하고 있다.
- 특히 캐나다, 독일, 스웨덴, 프랑스는 위험관리기구들이 농림부 중심으로 일원화되어 있다.

2. 발전방안

2.1. 식품산업

- 식품산업을 육성하여 국내 농산물의 수요 창출에 기여해야 한다.
 - 소비자들이 고급화된 식품을 선호하면서 안전한 원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식품의 고급화 트렌드는 수입 농산물에 비해 국산 원료의 수요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
 - 따라서 안전성과 기능성을 강조한 국산 식품원료를 생산하도록 촉진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해야 한다.
 - 이러한 기회에서 국산 원료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산 식자재를 이용하는 식품업체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 식품산업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
 - 향후 농업의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외식산업, 급식 및 식자재산업과 기능성 건강식품 제조산업, 가공산업 등은 고도성장이 전망됨에 따라 식품산업을 농림부의 정책대상에 포함시키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여 농업의 지속적 성장의 밑거름으로 삼아야 한다.
 - 이를 위해 식품산업의 시설현대화, 원료의 안정적 공급, 기술개발, 교육 및 컨설팅강화를 통해 식품업계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식품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 지역 농식품의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 도시의 재래시장과 지역을 연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 도시의 재래시장을 지역농식품의 안테나숍(Antena shop)⁵으로 활용하는

5 안테나숍은 생산자가 제품 홍보와 자사 제품에 대한 소비자 반응정보를 수집하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운영하는 소매점포이며 판매도 이루어짐.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와 도시 재래시장 상인들이 협력하여 재래시장을 지역농식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도록 하고 안테나숍을 홍보와 소비자 니즈를 수집하는 공간으로 사용해야 한다.

- 미국과 일본의 경우 지역에서 소비되는 식품을 지역에서 조달하는 지역 식품시스템(Local food system)이 강조되는 추세이다. 이를 통해 지역 소비자의 식품안전성도 높이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지역 소매유통업체들이 지역제품을 취급함으로써 대형유통업체에 비해 구색에서 차별화 전략을 가질 수 있다.

○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주체별 기술개발(R&D)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되 주체별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 특히 유통관련 기술인 전처리, 포장, 운송 기술이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떨어져 있으므로 많은 투자가 요청된다.
- 개별 기업들은 상품개발과 관련된 기술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정부는 식품안전성, 유통관련 기능 등을 포함한 기초기술과 관련된 기술개발과 보급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⁶.
- 김치 등 가공식품의 수출 확대를 위해 전통식품에 대한 국제적 홍보를 강화하고 외국인이 선호하는 전통음식의 세계화를 위해 한국음식을 외국소비자 취향에 맞게 표준화, 규격화하는 연구분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 식품산업의 현황을 분석하는데 필요한 각종 통계자료를 정리하여 일관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기업체와 정부, 기업체 간의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가 정착되어야 한다.

- 현재 담당기관 별로 식품산업통계를 작성하고 있는데 식품산업의 품목

6 생물소재를 이용한 식품의 안전성확보기술개발, 연구는 단기적으로 식품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고 장기적으로 생물자원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화에 대한 노력 및 지원이 미진한 것으로 평가됨(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05).

분류 기준도 통계자료마다 다른 문제가 있다.

- 식약청에서 작성하는 식품제조업통계에서 축산식품 통계자료가 누락되어 있고 식품산업통계에 푸드서비스와 유통통계가 누락되어 식품산업 통계로서의 활용가치가 낮은 문제가 있다.
- 지금까지의 식품관련 정책은 안전관리 측면에서 규제위주의 정책이었다. 앞으로의 식품정책은 안전성 관리와 산업진흥의 이원(二元) 체제로 개편되어야 한다.
 - 식품관련 소관업무와 조직이 통합 개편되어야 하고 두 분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조정기능을 담당하는 주체가 설정될 필요가 있다.
 - 농림부는 지금까지의 공급 중심의 농업정책에서 소비자 수요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 전통식품 인증제도에 대한 업체들의 개선 요구가 높고 외식산업과 전처리 산업이 급성장 중이다. 이런 추세에서 국내 농산물의 소비확대를 통한 농식품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식품업체에 대한 지원예산이 꾸준히 확보되어야 한다.
- 외식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 전통식문화의 세계화를 위해 전통외식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해야 한다. 음식관련 세계박람회 등에 전통음식을 출품한 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해외에 진출한 한식 외식업체의 외국 체인화 등 경영을 지원해야 한다.
- 식품산업분야의 전문인력을 육성해야 한다.
 - 식품관련 직능단체의 교육 기능 강화를 위해 직능단체별로 특성에 맞춰 위생, 안전 및 품질관리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전문분야별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자료를 업계에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새로운 식품 기술정보 등을 체계화하여 간접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식품산업 관련 자격증을 제도화하여 취업과 교육이 연계되어야 한다.

2.2. 식품안전

- 농식품안전정책의 목표는 선진 안전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식품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농장에서 식탁까지 일관된 농식품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농식품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이다.
- 국민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식품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 특히 식품유통과정에서의 안전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기본적인 콜드체인시스템과 생산이력제 등이 확대 시행되어야 한다.
- 생산단계에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GAP, 이력추적관리제도를 확대 시행해야 한다.
 - 전 유통채널에서 GAP, 이력추적관리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생산, 유통, 판매점의 등록이 필수적이므로 당사자들의 호응을 얻기 위한 홍보강화, 인센티브 지급이 필요하다.
 - HACCP는 축산물 보관, 운반업까지 포함하며 적용대상도 전 축종으로 확대해야 한다.
-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도축검사 및 안전성 검사 전문인력을 보강해야 한다.
 - 원산지 단속을 위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도 지속적으로 증원해야 한다.⁷

7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부정, 불량식품 신고에 대한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

- 농축산식품에 있어 항생제나 미생물, 중금속 등 잔류물질에 대한 기준설정을 명확히 해야 하며 잔류물질, 미생물 검사 등 안전성 검사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다양한 식품안전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하여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 유해물질에 대한 위해성 평가 절차와 결과, 식품안전 부적합률, 오염지역 정보와 같은 식품안전정보에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농축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을 완성하여 소비자로부터 정책의 투명성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 식품안전에 관한 언론의 발표는 공식 전문기관으로부터 사전 검증을 받는 절차를 통하도록 조치하여 왜곡된 보도로 인해 소비자로부터 불신을 받는 사례를 줄여야 한다.
- 수입농산물의 안전성확보를 위해 해외 현지 모니터 요원을 확보하여 정보수집 역량을 높여야 하고 대상국별로 안전기준을 적용하기 보다는 협약을 통해 안전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 영세한 외식업체의 식품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율위생관리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식당 개설을 인가제에서 허가제로 바꾸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 자율위생관리프로그램은 일본 도쿄지역에서 시행 중이다. 이 프로그램은 외부업체에 위생관리를 위탁하고 이를 시행하는 업체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 소비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고 범국민적인 감시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하여 명예식품위생감시원 제도를 운영해왔음. 2005년부터 명예식품위생감시원에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변경하고 역할을 강화·확대함. 이를 기반으로 각종 식품위생감시 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식품의 안전성 확보활동을 하고 있음.

- 소비자가 식품안전정책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농림부 내에 상설 기구로 ‘소비자안전센터’를 설치하여 식품사고와 관련된 신고접수창구로 운영해야 한다. 또한 피해자의 손해를 직접 보상하는 방식으로 시민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2.3. 식품영양

- 농림부는 국민에게 건강하고 영양 높은 농식품을 공급함으로써 소비자의 건강한 식생활을 책임지는 식품영양정책에까지 영역을 넓혀야 한다.
- 식품영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올바른 식생활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 농림부는 식품영양정책의 대상을 일반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뿐만 아니라 저소득 취약계층의 영양지원프로그램도 포함시켜야 한다.
 - 건강식생활을 위한 식품영양정책이 성공할 경우 소비자들은 국내농산물의 수요가 확대되어 농업 및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영양지원프로그램에도 국내농산물을 사용할 경우, 사회의 두 취약계층인 농민과 저소득층을 고려한 정책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건강한 삶을 위해 좋은 영양을 확보한다는 ‘식품안보(Food security⁸)’의 개념이 도입되어야 한다. 또한 식품정책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하다.

8 Food Security- access by all people at all times to enough food for an active, healthy life- is one requirement for a healthy, well-nourished population(USDA ERS, 2007).

- 농림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간에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재원조달구조 역시 여러 부처로 다각화해야 한다.
 - 선진국에서는 식품영양정책의 행정체제는 재원조달 및 시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범 부처간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 식품영양정책은 식품의 조달 및 공급방식, 지역 식품공급업체와의 연계 등의 측면에서 국내 농식품에 대한 소비 확대 효과를 유발시켜 지속적인 농업 및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 영국의 공공부문식품조달계획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⁹.

- 지자체와 연계를 강화한 국민영양개선 프로그램을 홍보해야 한다.
 - 국산 농식품의 소비촉진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지자체와 연결한 농산물 소비확대와 국민영양 개선을 위한 식생활지침 개발 및 보급, 단체급식에 대한 식생활 홍보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 소비촉진을 위해 정부는 각종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를 담당하고 지자체는 지역농산물과 연계한 실행프로그램을 추진해야 한다. 이때 생산자 단체와 민간단체는 의식운동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학교급식 및 급식업체에 국산 식재료 공급을 지원해야 한다.
 - 학교급식에서 국산을 소비하도록 품목 중심으로 보조지원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단체급식업체에서 국산농산물 계약거래 실적을 파악하여 이에 따라 원료수매자금 등을 차등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 식품영양정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저소득가구의 식품소비 및 영양상태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전국단위 조사를 통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

⁹ 영국의 사례는 발표 논문Ⅲ을 참조

- 영국의 경우 공공부문식품조달계획의 효과를 감시하고 평가하기 위해 식품소비 및 영양상태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의 실시와 함께 관련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다
 - 식품소비 및 영양섭취 모니터링내용은 모유수유율, 과일채소 섭취량, 식이섬유 섭취량, 소금섭취량, 총 지방 및 포화지방섭취량, 설탕 섭취량 등이다.
- 한국형 식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영양개선 관련 교육과 홍보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 국민건강 증진과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용도별로 적합한 한국형 식단을 개발하고 보급해야 한다.
 - 학교,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영양개선 교육 홍보물을 제작하여 보급하며 단체급식 담당 영양사에 대한 한국형 식생활 교육 및 식단보급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 식품위생법이 소비자의 보호, 영양제공, 영양 교육과 홍보가 부족하여 단편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농림부는 소비자의 영양과 바른 식품공급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한다.
- 식품안전성과 올바른 영양이라는 개념이 정착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과체중, 비만 문제를 해결하고 만성질환을 제거하는 바탕이 되어야 하겠다.

요약 및 정리: 조용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초청연구원)

식품산업정책의 평가와 과제

— 이 정 희 (중앙대학교 교수)

1. 머리말	23
2. 식품산업 정의와 식품산업정책의 대상 및 목적	24
3. 식품산업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28
4. 식품산업정책의 정책적 과제	36
참고 문헌	42

식품산업정책의 평가와 과제

1. 머리말

- 식품산업은 국민생활에 밀접한 산업이며 국민경제적 중요도 높아지고 있음
- 식품산업은 국민의 건강과 밀접하다는 이유로 직간접적으로 정부의 규제를 많이 받고 있는 산업임
- 또한 식품산업은 내수 중심의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지금까지 시장개방에 의한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꾸준한 성장을 이루어 왔음
- 그러나 최근 들어 유통 및 소비와 같은 시장환경의 변화에 따라 성장의 정체를 맞고 있음
- 더욱이, 최근 식품산업계를 뒤흔든 일련의 식품안전사고들로 인해 식품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정부의 안전성관리가 국민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음.
- 식품산업은 가공식품의 원료 및 식재료를 제공하는 농업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며 국민의 식생활 및 우리 문화의 보존과 홍보 등과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산업으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그러나 지금까지 식품산업에 대한 정책은 주로 규제 위주였으며 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규제 또한 관리의 다원화로 비효율적이라는 문제를 제기받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식품산업의 국가 경제적 중요성과 함께 우리나라 식품산업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및 향후 과제는 무엇인지 제시하고자 함. 먼저 식품산업의 주요 특성과 이슈를 알아보고, 식품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식품산업정책의 과제를 논의하기로 함

2. 식품산업 정의와 식품산업정책의 대상 및 목적

2.1. 식품산업의 정의

□ 식품산업이란?

- 원료농수산물을 이용한 식품의 가공·제조·보관·운반·유통·조리 및 식품서비스와 관련된 제반 활동에 관한 산업
-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식품산업의 통계 기준에 의하면 식품산업은 식품, 식품첨가물 및 기구, 용기, 포장지를 포함하고 있었음
- 이는 식품산업을 가공식품 위주의 지나치게 협의 개념으로 정의하는 것임.
- 식품산업은 식품가공산업, 식품서비스 및 식품유통업을 포함하며, 이 때 식품서비스에는 외식, 급식 및 식자재업이 포함되어 있음

2.2. 식품산업정책의 대상 및 목적

2.2.1. 식품산업정책의 대상과 범위

소비자 안전 및 국민 건강

- 식품산업정책의 가장 중요한 대상으로 손꼽힐 수 있는 것이 식품소비에서의 국민건강과 소비자 안전
- 지금까지 정부 식품산업정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음

식품가공생산

- 안전도하고 국민 건강에 좋은 품질 좋은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진흥이 필요함
- 원료생산에서부터 식품가공분야에 이르기까지 고품질의 식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산업의 환경을 조성해야 할 의무가 정부에 있음
- 정부는 규제 일변도에서 육성과 규제의 병행을 통해 식품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함
- 이 때 식품의 원료인 농수산물과 가공식품을 연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농수산업의 발전을 함께 도모하도록 해야 함

푸드서비스 및 식품유통

- 식품산업의 범위는 생산, 가공만이 아닌 외식을 포함한 푸드서비스와 유통분야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 때 광의의 유통은 도소매뿐 아니라 수출입까지 포함함

- 따라서 식품산업정책의 대상에는 식품의 도소매업과 외식서비스, 그리고 식품 수출입이 그 대상에 포함되어야 함

2.2.2. 식품산업정책의 목적

□ 국민건강 증진

- 먼저, 식품산업의 발전은 식품의 안전성 관리를 통한 국민건강의 보호 및 증대를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또한, 다양하고 고품질의 제품개발을 통해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고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식품산업이 발전되어야 함

□ 식품산업의 선진화를 통한 산업 경쟁력 증대

- 식품제조 및 관리기술이 세계적 수준으로 향상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Bio-Tech와 식품과의 연계를 통해 식품기술 경쟁력을 증대시킴
- 또한, SCM(supply chain management)과 생산이력추적관리시스템과 같은 혁신적 유통시스템의 구축으로 효율성 제고 및 안전성 증대가 이루어지도록 함
- 그리고 앞으로 보다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식품 서비스산업이 발전되지 않고는 식품산업의 선진화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음. 따라서 외식을 포함한 푸드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이루도록 함

2.2.3. 전통외식(음식) 및 전통식품의 세계화

- 전통 외식산업의 발전은 국내 농산물의 소비증대를 통해 우리 농업도 살리고, 또한 전통적 건강식단 제공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됨.

- 이외에도 전통 외식업의 발전은 우리 전통 식문화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효과도 있으며, 또한 식품 및 전통음식 원료의 수출에도 기여할 것임.
-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외식산업이 성장하고 있고 앞으로도 성장이 예상되는 이때에 전통 외식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범국가적인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함.
- 전통식품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먼저, 전통외식의 세계화가 이루어져야 함. 외국인들이 우리 음식을 접할 기회가 많아지고 우리 음식에 맛을 들이며 우리 식품의 고객이 될 것이기에 전통외식과 전통식품의 단계적 세계화 전략이 필요함.
- 이와 같이, 전통외식산업의 육성은 외식의 원료 공급처인 농업 발전과 관련되어 있고 또한 전통식품의 활성화를 이끌어내며, 그리고 전통 문화를 보존하고 수출하여 우리 문화를 세계에 확산 보급시키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음
-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 증대를 통한 국내 농업의 경쟁력 확보
 - 국내 농산물이 직면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수요 감소이며, 이러한 농업문제의 해결은 어떻게 수요를 창출하고 증대시켜 나가느냐에 달려 있음
 - 식품산업은 원료농산물의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에 식품산업의 발전 정도와 방향에 따라 농산물시장은 크게 영향을 받게 됨
 - 한편, 소비자들의 개성이 다양해지면서 가격 이외에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지고 있음.

- 따라서 식품산업이 국내 농산물의 수요를 증대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수가 있으며, 국내 농업과 식품산업의 관계를 발전적으로 연계시켜 나가도록 함

□ 고용 안정 및 증대를 통한 국민경제 기여

- 식품의 문화적 특성 때문에 무역자유화에 따른 국내 시장의 영향이 크지 않고, 향후 타 제조업에 비해 식품제조업은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나타낼 것으로 보임.
- 또한, 향후 예상되는 식품서비스 분야의 성장과 함께 식품산업은 고용 안정 및 증대로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선진국을 보더라도 산업의 발전과정에서 2차 산업이 위축되지만, 식품산업은 해외이전이 어려운 특성과 함께 국내에서의 고용효과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 역시 향후 경제성장과 함께 2차 산업이 위축이 불가피하지만 식품산업은 상대적으로 그 경쟁력을 유지할 수가 있으며 고용에 있어서도 국민경제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3. 식품산업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3.1. 식품산업정책의 현황¹⁰

- 식품관련 정책 현황: 식품위생 및 건강관련 규제 위주

¹⁰ 농림부 식품산업과, ‘식품산업진흥법 제정방안’ 식품산업진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2007.7.

- 식품위생법: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증진에 이바지
 - 축산물가공처리법: 축산물의 위생적 관리, 품질향상을 도모하여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 향상에 이바지
 - 국민건강증진법: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며 국민 건강을 증진
 - 기타 축산물소비촉진법, 낙농진흥법, 인삼산업법, 수산물품질관리법, 먹는 물관리법, 염관리법, 건강기능식품법
- 식품관련 소관부처 분산
- 식품관련 정부 담당부처가 다원화 되어있고 부처간 정책 공조 미흡
 - 현재, 식품종류별 및 생산, 유통단계별로 소관부처가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있고, 또한, 식품유형, 생산·유통단계별로 관련 법령도 27개에 이릅니다.
 - 식품관련 정부 주요 담당부처: 7개 부처로 분산
 - 일반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 보건복지부
 - 농축산물가공품 → 농림부
 - 수산물가공품 → 해양수산부
 - 천일염 → 산업자원부
 - 학교급식 → 교육부
 - 먹는 물 → 환경부
 - 주류 → 국세청

표 1. 식품산업 관련 부처별 주요 소관 법령

부처명	관련 식품(원료)	식품산업육성 관련법령
농림부	원료 농·임산물, 가축, 농·축산물 가공품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원유, 유제품	낙농진흥법
	가축, 축산물	축산법,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법률
	양곡	양곡관리법
	인삼(인삼류 제품 포함)	인삼산업법
	농산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
	친환경농산물	친환경농업육성법
해수부	수산동·식물, 수산물가공품	수산물품질관리법
	양식 수산생물	기르는 어업 육성법
	수산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
	수산물	수산업법
산자부	무역진흥대상 품목	대외무역법
	천일염	염관리법
교육부	학교 급식	학교급식법
환경부	먹는물	먹는물 관리법
국세청	주류	주세법
보건 복지부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률
	일반식품	식품위생법

자료: 한국식품연감, 농수축산신문, 2004

- 특히 식품산업에서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외식서비스 분야는 프랜차이즈산업(franchise industry) 차원에서는 산업자원부와 주무부처이고 요식업의 위생관리에서는 보건복지부, 관광 및 문화적 차원에서는 문화관광부가 주부 부서로 분산되어 있는 실정임
- 이와 같은 식품관련 행정의 다원체제는 식품관련 효율적 행정력을 저하시킨다는 비판과 함께 식품행정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함
 - 관련부처의 협조 부족: 식품안전처를 설립하여 식품안전 기능을 통합하

고 식품산업 육성업무는 생산부처에서 담당키로 합의(2006년 3월 국정 현안정책조정회의)하였으나 의약과 식품의 분리에 반대하는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반발 등으로 식품관련 조직개편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3.2. 식품산업정책이 개선되어야 할 이유: 유기식품정책의 사례

3.2.1. 유기식품정책의 현황

- 유기식품(organic foods)이란 유기농축산물을 포함하는 ‘유기농축산물’과 유기농축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유기가공식품’을 모두 일컫는 개념¹¹.
- 국내에서 유기농산물은 친환경농업육성법을 통해 국내 농산물이든 수입 농산물이든 농림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확인을 받아 ‘유기’표시 인증을 받을 수 있음
- 그러나 가공식품은 식품위생법에 표시 기준만을 정하였을 뿐 제3자의 검증 없이 생산자 임의로 표시할 수도 있게 되어있음
- 유기가공식품은 유기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식품으로, 여기에는 국내 농산물과 외국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수입 유기농산물로 제조·가공된 식품을 포함하고 있음.
- 그런데 유기가공식품은 관할부처가 보건복지부와 농림부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각 ‘식품위생법’의 ‘식품 등의 표시기준’과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의 특산물품질인증표지의 표시방법을 준용하고 있을 뿐임

11 한국식품연구원, 유기식품 인증시스템 구축을 위한 조사연구, 2005.12

표 2. 유기식품의 검사·인증제도

구분	농림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법적 근거	- 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령, 시행규칙)	-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품질관리원 고시)	- 식품위생법 (식약청 고시)
적용 대상	- 농림축산물	- 유기 농산물 가공품	- 가공 식품
검사·인증 주체	- 품질관리원 및 민관인증기관	- 품질관리원	- 없음
검사·인증 기준	- 2-3년간 유기적 관리 - 화학비료 및 농약사용 금지 - 유전자변형 종자 금지	- 국내산 유기농산물 사용 - 비인증 원료의 중량 비율 5% 미만	- 없음
표시 기준	- 유기농림산물, 유기축산물, 전환기유기농림산물	- 특산물품질인증표지의 표시방법 준용	- 유기 원료 함양 비율 95% 이상
표시 규제	- 인증 받지 않으면 표시 할 수 없음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특산물품질인증표지의 표시방법 위반에 한해 벌칙(좌동) 부과	- 없음

자료: 한국식품연구원, 유기식품 인증시스템 구축을 위한 조사연구, 2005.12

- 유기가공식품은 ‘유기’ 표시 이전에 유기적 가공 및 취급 여부에 대한 검증과 인증에 대한 강제 규정이 없는 실정임. 따라서 생산자나 유통업자가 자의적으로 ‘유기’ 표시를 할 수도 있도록 되어있음.

3.2.2. 유기식품시장의 정보 불균형과 시장의 비효율성

- 유기가공식품은 원료로 사용되는 유기농산물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으나, 지금까지 유기농산물은 관리가 되고 있지만 유기가공식품은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못하는 실정임
- 소비자들이 유기식품을 소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해당 제품에 대한 신뢰감임. 그런데 유기가공식품의 경우, 소비자는 생산자나 유통업체를 믿고 살 수 밖에 없는 실정임

- 어떤 재화나 서비스 거래에 있어서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완전한 정보를 갖고 거래를 할 수 있어야 그 시장이 효율성이 높음. 그러나 유기가공식품 거래에서는 생산자나 유통업자가 소비자보다 해당 제품에 대해 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소비자는 거래에서의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밖에 없게 됨. 이러한 정보 불균형은 유기가공식품의 유통을 더욱 비효율적으로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음
- 전 세계적으로 유기가공식품의 수요 급증과 함께 시장은 급속한 성장을 보이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기대만큼 성장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는 못하고 있음. 그 이유는 유기식품에 대한 잠재수요가 소비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먼저 거래에서의 신뢰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거래에서의 정보 비대칭성으로 불신이 발생하면서 잠재수요가 소비로 이어지지 못하기 때문임
- 유기가공식품 거래에 있어서 이러한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는 유기가공식품과 해당 생산자에 대한 부정적 정서를 조장할 수 있고 유기식품 유통효율성을 저해하고 유통비용을 증가시키며 결국 시장전체를 위축시키게 됨

<유기식품의 비대칭성 문제 >

- 유기식품시장의 경우,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해당 식품에 대해 판매자만큼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함.
- 따라서 사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유기식품이 진짜 유기식품인지 구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비싼 값을 지불하려고 하지 않음.
- 그러면 제대로 된 유기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여 생산한 유기식품도 시장에서는 제 값을 못 받게 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진정한 유기식품의 생산은 줄어들고 시장에는 값싼 거짓 상품이 주로 거래될 가능성이 더 커짐.
- 이와 같이, 정보의 비대칭성(asymmetry of information)으로 문제가 많은 유기식품이 시장에 많이 나오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를 ‘정보를 갖지 못한 측이 정보를 갖고 있는 측의 역선택(adverse selection)’에 직면하였다고 함

3.2.3. 유기식품정책의 문제점과 시사점

- 정부는 소비자가 유기식품을 믿고 소비할 수 있도록 시장환경을 조성해야 할 의무가 있음.
- 현재 유기농산물은 농림부, 가공식품은 식약청이 담당하는 관리의 이원화 문제도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것임. 국민의 건강과 소비욕구를 충족시키고 유기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정부는 정보의 비대칭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를 포함한 바람직한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함
- 유기식품정책은 식품의 안전성 증대와 소비자의 웰빙 욕구의 충족, 친환경 농산물을 통한 환경보호, 농업의 부가가치 증대 등의 다양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음. 그러나 현재의 농산물과 가공식품의 주관부처가 다르기에 그 중요한 정책적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음.
- 유기가공식품의 공신력 있는 검증과 인증은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게 하는 뿐만 아니라 동시에 유기가공식품 시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음. 이렇게, 식품산업은 안전성을 포함한 다양한 목적을 얻을 수 있도록 발전되어야 하며, 정부정책 또한 이에 부응하도록 수립되어야 함.

3.3. 해외 선진국들의 식품정책 주요 현황

- 농업과 식품의 연계 관리
 - 농림부 명칭에 식품(Food)을 포함하는 추세
 - 농업과 수산업이 함께 농수산부로 통합되어 있음
- 식품안전관리에 있어서 식품과 의약품은 분리되어 관리되고 있음

- 예: 프랑스의 식품안전청, 영국의 식품규격청 등
- 예외: 미국 FDA

<주요 선진국들의 식품관리부처 및 농림부 명칭>

- ▣ 프랑스: 프랑스의 식품관련 중앙부처로는 보건부(Ministry of Health Policy), 소비자부(Ministry of Consumer Affairs), 농수산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Fisheries)가 있으며 안전성관리는 이들 3개 부처의 공동 감독을 받고 있는 식품안전청(Food Safety Agency)에서 식품원료에서부터 가공, 유통 등 식품 안전과 관련한 전 분야를 관장하며 식품안전업무의 일원체제를 구축하고 있음.
- ▣ 덴마크: 덴마크는 식품의 품질과 안전성 및 식품산업진흥을 포함하는 식품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조직으로 식품농수산부(Ministry of Food, Agriculture and Fisheries)가 있음
식품농수산부에서 식품산업의 진흥을 맡고 있음(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업계의 상품개발과 혁신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음)
- ▣ 영 국: 환경식품농촌부(DEFRA, Department of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식품관련 국민건강과 소비자보호를 위한 영국식품규격청(Food Standards Agency)
- ▣ 독 일: 소비자보호·식품농업부(Federal Ministry of Consumer Protection, Food, Agriculture)

4. 식품산업정책의 정책적 과제

4.1. 정책적 과제

4.1.1. 국민건강 증진

- 식품 안전성 관리체계 구축
 - 식품안전성 제고를 위한 관리시스템 구축 필요
 - 식품안전성에 있어서도 특히 식품유통안전성이 크게 요구됨.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콜드체인시스템의 확대와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roblems)¹²의 강화, 생산이력제 및 SCM 구축 등의 노력 필요.
- 식생활 개선 홍보 및 교육
 - 식품영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그리고 정보 제공
 - 올바른 식생활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4.1.2. 식품산업을 통한 국내 농업 수요 창출 및 증대

- 농림부 시행착오 분석 필요
 - 실질적으로 1992년, 농림부의 산지가공육성정책과 함께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 노력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음.

¹²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는 식품의 원재료 생산에서부터 제조, 가공, 보존, 유통단계를 거쳐 최종 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규명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요 관리점을 결정하여 자주적이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식품의 안전성(safety)을 확보하기 위한 과학적인 종합위생관리체계이다.

- 산지가공육성정책은 산지에서 산지가공식품 및 전통식품 생산을 통해 부가가치 증대의 인식을 제고시키는 계기가 됨
 - 그러나 대다수의 산지가공업체 및 전통식품업체들이 도산 하는 등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 왔음
 - 이러한 시행착오를 면밀히 분석한다면, 향후 농림부의 식품산업정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임.
- 국내 농수산물의 원활한 식품산업 원료 공급체계 조성
- 식품산업을 위한 원료의 조달이 용이하도록 함으로써 국내 농수산물의 수요증대를 꾀하도록 하여야 함
 - 웰빙 수요의 증대와 함께 식품의 고급화가 확산하며, 원료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음. 식품의 고급화 트렌드는 국산 원료의 수요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
 - 이러한 기회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산 원료의 우수성과 국산 원료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는 공급체계의 조성이 무엇보다 필요함. 그리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국산 농수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이러한 결과로서 국산 농수산물이 원료로 사용된 식품을 선호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함.
 - 또한 국산 농수산물을 이용하는 식품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 수립이 필요함.
 - 그리고 국산 농수산물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유통환경 조성은 필수적인 정책이 될 것임
- 전통가공식품 및 전통외식의 활성화
- 지역특산물의 가치 증대 및 활성화 노력
 - 전통성 및 지역성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 노력
 - 지역 푸드시스템(Local Food System)의 확산
 - 지역특산물을 위한 경쟁력 있는 유통경로 개척

- 소비지 재래시장과의 연계 협력
 - 전통외식 세계화의 선행과 전통식품의 세계화
 - 전통식품 세계화를 위해서는 먼저 전통음식(외식)의 세계화가 선행되어야 함.
- 지역특산물의 가치 증대 및 활성화 노력 증대
-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지역 특산물이 가치를 크게 인정받고 있는데 비해 우리는 지역적인 것 보다는 전국적인 것이 보다 추구 되면서 지역 식품의 가치가 낮은 문제가 있음.
 - 가치 창출에 있어서 지역성의 가치를 높게 인식시켜 주려는 노력이 농정에 함께 담겨야 함.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지역푸드시스템(Local or Community Food System)이 많이 강조되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 소비되는 식품은 가능한 지역에서 조달하도록 하는 것임. 이는 지역 소비자의

<재래시장을 지역특산물의 안테나숍으로 활용>

- 최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재래시장을 찾는 고객들의 80%가 1차 식품 때문에 재래시장을 찾고 있음¹³
- 일본에서는 재래시장의 경쟁력도 높이고 지역농산물이나 특산물의 홍보와 판매도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도시 재래시장을 지역농산물이나 특산물의 안테나숍¹⁴으로 이용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와 재래시장 상인들의 협력으로 도시에 있는 재래시장을 지역특산물전문으로 특화하고 안테나숍을 마련하여 홍보의 장으로, 또 소비자 정보를 수집하는 장으로 활용함.
- 이러한 노력은 지역 농산물 및 특산식품의 판로 확대와 함께 소비자 니즈에 부응하여 경쟁력 증대시키는 결과가 될 수 있음

13 한국갤럽, 할인점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 2007.4.

14 안테나숍은 생산자가 제품 홍보와 자사 제품에 대한 소비자 반응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운영하는 소매점포이며 판매도 이루어질 수 있음.

안전도 높이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음. 또한 지역 소매유통업체들이 대형유통업체와 지역제품을 취급함으로써 구색의 차별화가 가능하여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도 있음.

- 지역 특산물의 판로 확보에 있어서, 도시 재래시장과 지역의 연계 전략이 필요함. 재래시장을 지역특산물 전문시장으로 특화시켜서 대형유통점과 차별화하도록 하고 지역 농산물 및 특산물의 안테나숍으로 활용하여 재래시장과 농수산물 생산자 모두가 윈윈(win-win)하도록 함.

4.1.3. 식품산업의 경쟁력 증대

- 식품산업의 국제적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 강화
 - 국과위 조사에 의하면, 우리 식품기술수준은 선진국의 30~6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특히 유통관련 기술이라 할 수 있는 전처리와 포장 및 운송과 관련된 기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식품산업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식품의 생산 및 유통에 있어서의 R&D에 대한 투자를 더욱 강화해야 함.
 - 이를 위해서 개별 기업들과 정부의 역할분담이 필요함. 기업은 상품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정부는 기초기술 및 발표나 포장 등의 기술개발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함
- 식품산업의 통계자료의 정비 및 DB구축 필요
 - 식품산업의 현황을 분석하는데 필수적인 통계자료 부족으로 연구 및 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큼. 각 부처별로 각각의 목적에 따라 식품산업통계를 작성하고 있고, 식품산업의 품목분류 기준도 통계자료마다 상이한 실정임. 예를 들어, 식약청에서 작성하는 식품제조업통계에서 축산식품통계(농림부 소관)자료가 빠져 있고 식품산업통계에 푸드서비스와 유통통계는 누락되어 있어서 식품산업통계로서의 활용가치 낮음

- 내수 중심의 시장구조 극복
 - 우리 식품산업은 국내제조업 생산의 1/5를 차지하는 중요한 산업으로서 성장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나, 아직도 내수중심으로 운영되며 성장의 한계를 보이고 있음
 - 그 동안 식품은 대표적인 내수산업으로 평가되면서 국내시장에 안주하는 경향을 보여 왔음.
 - 그로 인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해외시장 개척에 미흡했음
 - 이제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수출경쟁력을 높이는데 강도 높은 업계의 노력과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뒤따라야 함

- 비합리적이고 과도한 규제 개선을 통한 식품산업 발전 도모
 -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식품정책은 육성보다는 규제위주의 정책이었음
 -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는 식품산업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지만 지나친 규제는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에 보다 과학적 근거에 의한 규제 기준을 마련해야 함.

4.2. 식품관련 정부 행정체계 개편에 대한 제언

- 식품 안전관리 위주에서 산업진흥의 병행관리로 전환
 - 지금까지 식품정책의 안전관리 측면의 규제 위주
 - 식품산업은 산업 측면의 정책 대상이 아닌 안전성 측면의 규제 대상이었음. 산업진흥의 주관부처인 산업자원부에는 식품관련 부처나 업무가 없으며 식품산업체를 대표하는 사단법인 한국식품공업협회는 식품위생법의 구속을 받는 법정단체로 되어 있음.
 - 따라서 앞으로 식품정책은 안전성 관리와 산업진흥이라는 이원 체제로 개편되어야 함.
 - 그리고 7개 부처로 나누어져 있는 식품관련 소관업무와 조직이 통합 개

편되어야 함. 예를 들어, 해양수산부의 수산업은 농림부로 이관되어 농림부는 농산물이 아닌 농수산물의 관리를 책임지도록 함.

- 그리고 이 두 분야의 협력관계를 위해 조정 기능의 국무총리실에 식품관리특별위원회(가칭)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함.
- 농림부의 공급 중심의 농업정책에서 수요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 필요
 - 이를 위해, 먼저 소비자 문제 및 식품산업 관리 위주의 부서 확대 개편 등의 농림부의 조직 개편이 필요함

참고 문헌

- 국과위. 『국가기술지도: 비전Ⅴ 국가안전 및 위상 제고』. 2002.11
- 농림부 식품산업과. ‘식품산업진흥법 제정방안’ 식품산업진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2007.7.
- 농수축산신문. ‘한국식품연감’. 2005.
- 이정희. ‘식품산업정책의 방향과 과제’. 농정연구 통권19호. 2006.
- 한국갤럽. 할인점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 2007.4.
- 한국식품연구원. 유기식품 인증시스템 구축을 위한 조사연구. 2005.12

식품안전정책의 평가와 과제

— 최 지 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서론	45
2. 식품안전관리 여건의 변화	46
3. 정책추진 현황	49
4. 선진국의 식품안전관리동향	57
5. 평가와 과제	60
참고 문헌	64

식품안전정책의 평가와 과제

1. 서론

- 식품소비패턴은 경제성장과 핵가족화 및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등 경제·인구·사회적 요인의 변화로 고급화, 다양화, 간편화되고 있다. 2005년 도시가구의 식료품비 지출에서 가공식품의 비중은 43%, 외식비 비중은 49%에 달해, 가공식품과 외식소비는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 시장개방의 확대에 따라 식품 수입(금액기준)은 1998년 이후 2배, 수입건수는 3배 증가하였다. 칼로리 기준 식량자급률은 2000년대 60%에서 46%까지 하락하여 먹거리의 50%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게 됨에 따라 수입식품의 안전문제도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 식품안전관리는 농식품의 종류와 취급단계에 따라 부처별 분산 수행되고 있어 식품사고발생시 효율적인 대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식품의 생산에서부터 소비까지 일관되게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며, 정보공개 등으로 소비자 신뢰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 최근 정부는 농산물 안전성 확보의 주요정책수단으로서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와 이력추적관리제도(Traceability)를 추진하고 있으며, 가공식품과 축산물에 대해서는 HACCP제도의 도입을 장려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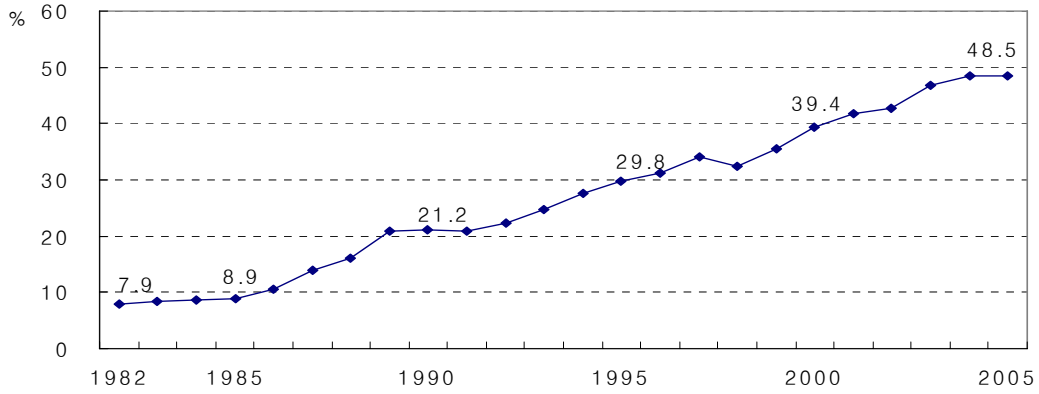
- 본 글에서는 식품안전을 둘러싼 여건변화를 간략히 살펴보고 식품안전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GAP, Traceability, HACCP제도의 운영실태 등 국내 식품안전정책의 추진실태를 검토하였으며, 선진국의 식품안전관리 동향을 파악하여 향후 식품안전정책의 추진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2. 식품안전관리 여건의 변화

2.1. 식품소비패턴의 변화

- 식품소비패턴 변화의 특징은 가공식품과 외식소비 증가로 크게 설명된다. 도시가구의 식품 소비에서 신선식품은 1982~2005년간 연평균 1.5%의 감소추세를 보인 반면, 같은 기간동안 가공식품은 연평균 3.3%의 증가추세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식품비 지출에서 가공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982년 20%에서 2005년 43%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 외식비는 1982~2005년간 10.9%의 높은 증가추세를 보이며, 식료품비 지출에서 외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2년 7.9%에서 2005년 48.5%로 빠르게 증가하였다.
- 시장개방으로 식품 수입량은 1998~2005년간 연평균 13.4%(금액기준)씩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 안전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도 크게 증가하였다. 친환경농업이 한국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농가수는 전체 농가수의 약 4.3%, 인증면적은 전체 경지면적의 약 2.7%, 농산물생산량은 전체 농산물생산량의 약 4.4% 수준이다.

그림 1. 도시가계 식료품비에서 외식비의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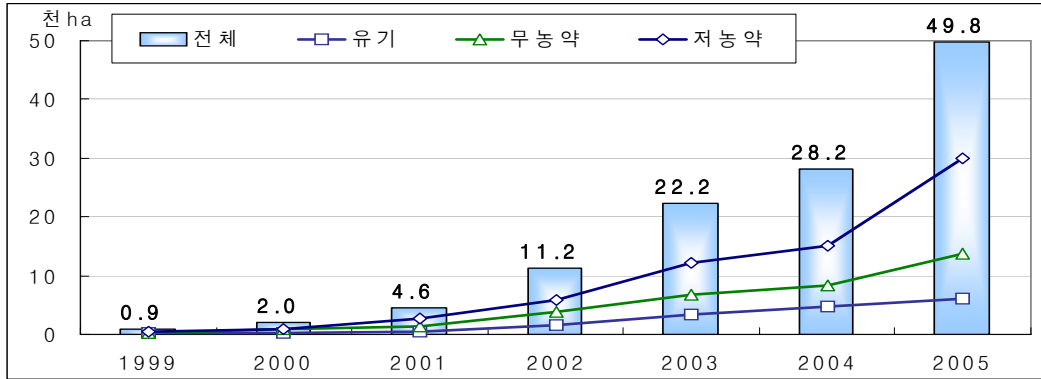
- 연도별 국내생산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을 보면, 농가수는 1999년 1,306호에서 2005년 53,478호로 매년 85.7% 증가, 인증면적은 1999년 875ha에서 2005년 49,807ha로 매년 96.1% 증가, 인증량은 1999년 26,646톤에서 797,747톤으로 매년 76.2%의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표 1. 연도별 식품수입현황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연평균 변화율 (%)
검사건수	68,550	108,280	133,761	147,742	166,723	185,299	191,152	215,496	17.8
중량 (천톤)	8,224	9,780	10,351	10,514	10,488	11,119	11,443	11,261	4.6
금액 (백만불)	3,152	3,574	4,036	4,283	4,621	5,801	6,070	7,586	13.4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식품 등 검사연보』, 각연도

그림 2. 연도별 국내생산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추이



자료: 농림부

2.2. 소비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

- 소득 증가, 웰빙 바람 등으로 소비자들이 식품 소비에서 안전성을 중요하게 고려하기 시작하였다. 품목별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식품특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육류는 최근 광우병과 구제역 파동에 따른 영향으로 안전성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었고 가공품 역시 집 밖에서 가공·처리되는 특성으로 인해 안전성여부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품질차이가 큰 쌀과 신선도를 중시하는 채소는 맛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었다.

표 2. 식품 선택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품질 특성

단위: %

구분	쌀	채소류	육류	가공품
맛	44.0	40.5	35.5	27.0
안전성	18.1	23.0	46.9	51.4
영양	9.9	2.7	4.2	6.8
가격	22.3	26.5	4.2	6.9
선별·포장 등	5.7	7.3	9.1	7.9
계	100.0	100.0	100.0	100.0

자료: 수도권 467가구 조사결과(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4)

2.3. 식품안전행정체계 개편 추진

- 정부는 2003년 8월부터 국무조정실내에 식품안전 T/F 팀을 구성하여 식품안전관리제도 개선과 관련 행정개편을 추진해 왔다. 2004년 6월에는 「1차 식품안전종합대책」이 발표되었는데 대폭적인 조직 개편 대신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방안이 마련되었다. 특히 신설되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가 부처간 식품안전업무를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 그러나 2004년 이후 말라카이트그린 오염 등 대형식품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일관된 식품안전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정부내 의견과 국내여론에 따라 생산단계에서부터 소비까지의 식품안전관리기능의 통합하여 정책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는 2006년 3월 「식품안전처」의 설치를 결정하였다.
- 그러나 2006년 10월 국무회의에서 「식품안전처」 설립을 포함한 관련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의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관련소위원회의 의원들의 반대로 개정안이 상정되지 못해 현재로서는 식품안전처 출범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3. 정책추진 현황

3.1. 추진체계

- 식품안전관리는 식품의 종류와 생산·유통단계에 따라 복지부(식약청), 농림부, 해수부, 교육부 등으로 업무가 분산 수행되고 있다.

표 3. 식품유형별, 취급단계별 안전관리 추진 체계

구 분	재배/사육/ 양식 등	수입		국내 가공	유 통 (보관/운반등)	소 비 (식당, 백화점 등 최종판매단계)
		비·단순 가공	고차 가공			
농산 식품	정책	농림부	복지부/식약청			
	지도 단속	농림부/ 지자체	식약청		식약청/지자체	
수산 식품	정책	해수부	복지부/식약청			
	지도 단속	해수부	해수부	식약청	식약청/지자체	
축산 식품	정책	농림부	농림부/식약청(유해물질 잔류기준)			복지부
	지도 단속	농림부/ 지자체	농림부		농림부/지자체	식약청/지자체

- 학교급식(교육부), 주류(국세청), 천일염(산자부), 먹는샘물(환경부)은 담당부처가 식약청 및 지자체와 연계하여 관리

- 농림부의 농산식품 안전관리는 생산단계에 국한되어 있으며, 축산식품의 경우 생산에서부터 가공, 유통까지 안전관리를 담당한다. 식약청은 축산식품을 제외한 식품의 안전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최종 유통 및 소비단계에서의 농식품안전관리 지도단속업무를 수행한다.

3.2. GAP

- 농장에서 식탁까지 일관된 농식품 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식품안전의 공통된 목표이다. GAP(우수농산물관리제도)는 생산부터 수확후 포장단계까지 농약, 중금속, 미생물 등 농식품 위해요소를 관리하는 제도이다. GAP는 2003~2005년 동안 시범사업을 거쳐 대상품목과

참여 농가는 2006년 대상품목 96개, 참여농가는 3,659호로 각각 크게 증가하였다.

- GAP사업은 2005년 8월 농산물품질관리법을 개정하여 도입근거를 마련하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도 2006년 1월에 정비되었다. GAP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서 표준재배지침과 우수농산물관리기준 및 이력추적관리기준이 설정되었는데 표준재배지침은 2003년 67개 품목에서 2004년 82개, 2006년 96개로 작성 품목이 늘어났다. 생산·유통·판매자가 GAP 농산물 취급시 지켜야 할 기록·보관 등 관리 기준도 정비되었다.

표 4. GAP 적용 대상품목 및 참여 농가수 현황

구분	대상품목(개)	참여농가(호)
2003	5	9
2004	21	357
2005	47	965
2006	96	3,659

자료: 농림부

표 5. GAP 사업추진 계획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2008
예산(억원)	-	4	22	50	250
GAP농가(호)	9	357	965	3,000	30,000
인증기관(개소)	1	4	6	15	20
도입비율(청과물기준, %)	-	-	-	-	2

자료: 농림부

- GAP 인증은 공식적으로 2006년부터 실시되었다. 인증방식은 유럽 등과 같이 민간인증제도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민간인증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시행하고, 민간인증기관에서 직접 인증과 농가관리를 하도록 인증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2006년 12월 현재 농협, 유통공사, 이마트, 롯데마트 등 21개 기관이 인증기관으로 시범 지정되었다.
- 정부는 2008년까지 GAP와 관련한 예산을 250억원까지 확보하고, 도입농가수 3만호로 늘리는 등 사업량을 확대하여 2008년까지 청과물의 GAP도입비율을 2%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3.3. 이력추적관리제도(Traceability)

- Traceability(이력추적관리제도)는 농산물의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안전성 문제발생시 이력을 역추적하여 원인규명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제도이다. 이력추적관리제도(Traceability)는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개념정립에 의해서 관련 규격문서에 이력추적의 개념이 강화되고, 각 국에서도 식품안전 관리를 위해 이력추적 개념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EU는 2005년 1월부터 모든 식품에 대해 Traceability를 적용할 것을 회원국에 의무화하였다.
- 국내에서는 쇠고기에 대해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농산물의 경우 Traceability와 GAP는 별개의 제도이나, GAP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Traceability 이행이 기본조건이다.
- 소의 이력추적관리제도 개념은 생산·도축·가공·유통과정의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문제 발생시 이동경로를 따라 추적 또는 소급하여 신속한 원인규명 및 조치를 가능하게 하여 소비자를 안심시키는 제

도로 정의된다. 소는 개체별로 유일한 개체식별번호가 부여되고 귀표 등을 장착하여 출생·이동 및 도축단계까지 신고내용을 DB화하여 관리한다. 소비자는 구입한 쇠고기의 원산지 및 품질 등을 인터넷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게 된다. 도축단계 이후는 식육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 유통된다.

- 소의 이력추적관리제도는 2004년 10월 9개 우수 브랜드 경영체를 선정하여 시범사업 형태로 실시하게 되었다. 2007년 7월 현재 시범사업 참여브랜드는 22개소, 참여두수는 63만 두, 참여시군은 56개 지역에 달한다. 정부는 2008년부터 한·육우 전 두수에 대해 이력추적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며, 2009년까지 국내산 소 전 두수(젓소포함 2,300천두)에 대해서 개체관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2008년에는 돼지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표 6. 연도별 소 이력추적관리제 시범사업 추진상황

구분		2004	2005	2006	2007.7
참여업체(수)		9	9	20	22
참여두수(천두)		40	59	210	630
참여시군		-	-	3	56
사업장 (개소)	도축장	10	13	21	21
	가공장	10	13	24	26
	판매장	10	30	93	133

자료: 농림부

3.4.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

- 최근 식품안전사고의 대형화와 건강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축산물 안전성을 위협요소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상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
- 한편 수출증대를 위해서는 국제기준과의 조화가 필요하며, 국내 축산업의 보호도 필요하다. WTO/SPS 및 Codex에서는 농·축산물 및 식품의 교역에 있어서 HACCP을 의무 적용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이러한 배경하에서 축산식품에 대해 HACCP제도가 시행되어 왔다. HACCP 시스템은 농장에서부터 소비자의 식탁까지 위해의 발생을 예방하는 제도로써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인 위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다.
- 1997년부터 도축장과 축산물 가공장에 HACCP이 적용되어 2003년 7월부터는 전국 도축장에 HACCP를 의무 적용하였다. 2004년에는 운반·보관·집유·판매에 대한 HACCP 도입 근거를 마련하였다. 2006년에는 사육단계에 운용할 HACCP 도입근거도 마련하였다.
- 2007년 3월 현재 HACCP 지정 운영 현황을 보면 전국 도축장 165개소 중 HACCP 적용 도축장은 142개소(포유류 97, 가금류 45)이다. 미적용 도축장 23개소는 적용 대상이 아니거나 영업정지, 휴업중으로 대부분의 도축장이 HACCP을 의무적으로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
- HACCP는 가공단계 뿐만 아니라 사육, 보관·운반·집유업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지침과 모델을 개발 중이다. 돼지는 2006년 6월 사육단계 HACCP 지침 및 모델 개발이 완료되었고 젓소는 2007년까지, 산란계 및 육계는 2008년까지 각각 지침과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표 7. 축산식품 HACCP 도입 현황, 2007. 3.

단위: 개소

도축장	축산물 작업장 ¹⁾	배합사료	계
142	459	59	660

주: 1) 식육포장처리업 318, 식육가공업 97, 유가공업 39, 식육판매업 2, 알가공업 3
 자료: 국립수의과학검역원

3.5. 안전성조사 등 감시 프로그램

- 정부는 산지에서의 농산물 안전성 감시 강화를 위해 생산단계에서 농약 등 위해물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안전성조사 품목과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2006년 178개 품목, 65,890건으로서 총 농가의 5% 정도가 검사대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2006년도 부적합비율은 1.1%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다.

표 8. 농산물 안전성조사 실적

연도	조사품목	조사건수			부적합건수 (B)	부적합비율(%) (B/A)
		정밀분석	속성분석	계(A)		
2000	124	11,672	31,056	42,728	525	1.2
2001	128	15,110	40,234	55,344	636	1.1
2002	134	17,011	38,999	56,010	600	1.1
2003	135	19,328	40,242	59,570	880	1.5
2004	138	20,371	40,196	60,567	770	1.3
2005	155	23,689	40,035	63,724	730	1.1
2006	178	27,652	38,238	65,890	750	1.1

자료: 농산물품질관리원

- 농림부는 수입농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2005년부터 「수입농수산물 통관·유통개선 T/F」를 운영하여 수입 농수산물의 통관 및 국내유통 실태 파악 및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농협 등 생산자 단체도 「농산물 불법수입 및 유통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였다. 또한 정부는 원산지 허위표시자에 대한 처벌강화와 상습위반자 공표 등을 주 내용으로 농산물품질관리법을 2006년 1월 개정하여 수입농식품의 불법유통방지를 중점적으로 지도·감독하였다.

3.6. 농축수산물 안전정보시스템

- 식품안전사고의 다양화, 글로벌화 등에 따라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으나 안전관리 측면에서는 식품안전정보의 활용도는 낮고, 기관간 공유체계가 구축되지 못해 비효율성이 존재해 왔다.
- 2003년 11월 “농축수산물 안전정보시스템 구축”이 전자정부 로드맵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농림부·해양수산부 차관보를 단장으로 하는 공동추진단이 구성되어 운영되었다.

표 9. 농축수산물 안전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예산

단위: 억원

구분	합계	소요예산					
		'04	'05	'06	'07	'08	'09
전자정부지원	246	6	57	83	100	-	-
차 체	226	-	7	27	85	82	25
합 계	472	6	64	110	185	82	25

- 농축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목표는 생산부터 소비까지(From Farm to Table) 농축수산물의 안전성을 보증(Assurance)하는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정보제공시스템(Contents Provider)을 확보하는데 있다. 특히 농축수산물안전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며, 위험정보를 수집·전파하여, 환류하는 쌍방향의 위험정보교환채널(Risk Communication Channel)을 구성하여 농축수산물 안전사고에 대한 긴급대응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 농축수산물 안전정보시스템 구축 소요예산은 2009년까지 총 472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농축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 구축은 관련정보의 수집·유통통로를 확보함으로써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시켜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4. 선진국의 식품안전관리동향

- 모든 식품공급체인(farm to table)의 일괄관리: 이력추적제 실시
 - 식품은 생산단계에서부터 위해요인이 존재하고, 유통단계를 거치면서 새로운 위해요인이 추가되므로 단계별로 발생위험을 명확히 파악하고 확실한 정보전달체계구축을 통해 식품안전을 통합 관리해야한다는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 정부는 안전관리 의사결정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단계별 종사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규명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신뢰를 제공할 수 있다. EU에서는 2005년 1월부터 모든 식품에 대한 이력추적제를 실시하도록 회원국에 요구함으로써 모든 식품공급체인에서의 안전성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식품안전관리정책의 투명성 확보

- 정책의 투명성제고를 위해서는 위험관련정보와 의사결정과정 등이 공개되고 이해당사자간에 공유될 수 있어야 한다. 주요국들은 위험평가기관-위험관리기관, 위험평가기관-소비자, 위험관리기관-소비자 상호간 정보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특히 정부의 소비자대상 안전교육 및 계몽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 역점

- 과학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식품이 공급되고, 산업화에 따른 오염물질의 만연으로 식품위해요인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의 식품안전성 확보에 대한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다. 선진국들은 이에 부응하여 식품안전문제를 소비자 문제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U는 건강·소비총국에 「소비자위원회」, 영국은 식품기준청(FSA)에 「소비자위원회」를 각각 설치·운영하여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과학주의에 입각한 식품안전정책 추진

-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식품위험관리를 과학적인 근거에 입각해 수행하기 위해서 위험분석원칙을 도입하여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BSE, 다이옥신사고 등을 경험하면서 직관에 의한 의사결정과 사후처방적인 대응이 한계에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식품안전문제를 위험평가-위험관리-위험정보교환을 축으로 구성되는 위험분석체계(risk analysis system)에 의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하게 되었다.

□ 식품안전관리행정의 일원화 및 통합 추진

- 선진국에서는 소비자에게 식품안전에 대한 신뢰구축을 위해서 생산단계에서부터 소비단계에 이르는 안전관리 행정이 특정 기구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 일원화 사례: 영국의 FSA , 캐나다의 식품검사청(CFIA), 독일의 소비자 보호식품청(BVL), 뉴질랜드의 식품안전청(NZFSA), 덴마크의 DVFA, 스웨덴 NFA 등

○ 캐나다, 독일, 스웨덴, 프랑스 등은 이들 위험관리기구들이 대체로 농림부 등 생산부서(캐나다-농업식품부, 스웨덴-농업식품소비자부, 독일-소비자 보호식품농업부, 프랑스-농어업부) 중심으로 일원화되어 있다. 덴마크는 가족소비자부로 일원화되어 소비자 중심으로, 영국이나 호주는 독립적이지만 보건부 감독 하에 식품안전관리를 일원화한 형태이다.

표 10. 최근 개편된 주요선진국의 식품안전관리 체계 비교

구분		덴마크	독일	캐나다	영국
식품 안전 관리	종전	수의식품청 -식품농수산부	부처 분산 수행	부처분산 수행	농수산식품부와 보건부로 이원화
	개편	수의식품청 -가족소비자부	소비자보호 식품안전청 -소비자보호 식품농업부	식품검사청(CFIA) - 농식품부	식품기준청(FSA)
해당 식품 청의 독립성	성격	부처 산하	부처 산하	독립적	독립적
	책임 장관	가족소비자부 장관	소비자보호식품 농업부장관	농식품부장관 (보고 의무) 보건부장관(식품안전, 영양, 공중보건 정책, 규격 결정)	보건부 장관(경유 후 의회보고)
위험 분석	위험 평가	수의식품청 -수의식품연구소	연방위험평가기관 (BfR)	CFIA(동식물) 보건부(식품안전)	식품기준청(FSA)
	위험 관리	수의식품청	BVL 지자체	CFIA (식품안전, 동식물)	식품기준청(FSA) 환경식품농업부 (DEFRA) 보건부(DOH)
	위험 정보 교환	수의식품청	BfR	CFIA	식품기준청(FSA) 환경식품농업부(D EFRA) 보건부(DOH)

5. 평가와 과제

5.1. 정책평가

□ GAP/Traceability

- GAP 사업은 2003~2005년간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고, 관련법의 정비·지침 개발·교육 및 훈련 등 관련 인프라가 매년 확대 구축되었으나 민간 인증제도가 확립되지 못해 인증의 객관성 확보와 철저한 사후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단기간 내의 사업 확장으로 인한 홍보 부족으로 소비자의 인지도가 낮고 기존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와 차별성이 부각되지 못해 소비자 신뢰국축에 어려움이 있다.

□ HACCP

- 선진 위생관리기법인 HACCP의 축산물 적용 확대는 가공에서부터 사료 분야에 이르기까지 크게 확대되어 축산물 안전성제고 기반이 강화되었다. HACCP 도입비율은 도축장의 경우 2002년 51%에서 81%로 높아졌으나 식육을 가공, 포장하는 가공장의 경우 8%에 불과해 가공장의 HACCP 도입 확대가 요구된다.

표 11. 소비자의 GAP 및 이력추적관리제도의 인지정도

단위: %

구 분	안다	모른다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42.0	58.0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Traceability)	26.5	73.5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산지 안전성 감시 기능

- 중금속 오염이 증가하고 단체 급식 등 대량 조리·운반 증가에 따라 식중독 발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농산물에 대한 중금속과 미생물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부족한 실정이다. 농산물 중 쌀, 고구마, 배추, 파 등 10개 품목만 납과 카드뮴 잔류기준이 설정되었고, 미생물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은 설정되어 있지 않다.

5.2. 과제

- 궁극적으로 농식품안전정책의 목표는 선진 안전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식품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농장에서 식탁까지 일관된 농식품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농식품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주요과제가 중점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5.2.1. GAP/이력추적제 및 HACCP 확대 시행

- 생산단계에서부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GAP 및 이력추적관리제도 확대 시행이 필수적이다. 또한 축산물에 대한 HACCP제도의 적용을 축산물보관·운반업까지 확대하며, 사육단계 적용대상을 돼지에서 소와 닭까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쇠고기 이력추적관리제도 시범사업도 매년 확대하고, 돼지에도 확대 적용해야 한다.
- GAP와 이력추적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생산·유통·판매점의 등록이 필수적이나 홍보와 인센티브 미흡으로 해당업체의 호응도가 낮아 홍보 강화 등 대책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5.2.2. 잔류기준 설정 등 농식품 안전성 확보기반 확충

- 축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도축검사 및 안전성검사 인력은 크게 부족함으로 전문 인력의 보강이 요구된다. 농축산식품에 있어서 항생제나 미생물 등의 잔류물질에 대한 기준설정도 확대해야 하며, 잔류물질 및 미생물검사 등 안전성 검사는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원산지 단속을 위해 지속적인 명예감시원 증원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과학적인 원산지 식별기법을 도입하여, 과학적인 지도감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5.2.3. 안전성관련제도 홍보 및 교육 강화

- GAP/Traceability, HACCP 등 선진 식품안전성관리제도에 대한 소비자, 유통업자의 인지도가 여전히 낮아 정책효과를 극대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소비자 대상 홍보의 강화, 유통업체의 참여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제 도입 등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
- 사육단계에서 일부 농가의 경우 동물용의약품이나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잔류허용기준 초과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산지에서의 농산물 안전성관리를 위해 농업인에 대한 교육 강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5.2.4. 농축수산물안전정보의 공개로 신뢰 구축

- 식품안전정보는 위반농가, 부적합률 정도만이 매우 제한적으로 소비자에게 공개되고 있다. 유해물질에 대한 위해성 평가 결과, 위해성 평가 절차, 폐광산과 같은 오염지역의 정보 등은 소비자에게 공개하여 신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구축중인 농축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이 완성되면 투

명성과 신뢰성을 제고시켜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2.5. 수입농식품 안전관리 강화

- 수입농축산물의 안전성관리의 당면과제는 해외정보수집능력 부족과 유관기관간 정보공유 시스템공유 미흡을 들 수 있다. 해외 현지 모니터 요원 확충을 통한 정보수집 역량의 점진적 확대로 해외정보 수집 국가수와 품목수를 늘리며, 수입농산물 통관·유통관리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단체간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5.2.6. 생산부처주도의 식품안전관리체계의 개편 검토

- 현재 식품안전행정은 업무분장과 관련 법률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지 못해 생산에서부터 소비까지 일관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 농식품 안전관리는 토양, 수질 등 환경자원과 농약·항생물질 등의 위해요소를 생산단계에서부터 지도·감시하고 가축질병관리 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농림부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이 필요하다.
- 식품에 대한 위험평가기능이 선진국에 비해 취약하다. 중장기적으로 식품 위험분석체계 중 위험평가기능은 별도로 분리하여 기능을 강화하고 예산과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참고 문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GAP/Traccability 인지도 및 인식조사결과보고서」. 2005.
- 최지현. “선진국의 식품정책과 시사점”. 『세계 농정의 동향과 전망』. 2007
- 최지현. “수입 농식품 안전관리의 당면 문제와 발전방향.” 『농업전망 200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6.
- 최지현·이계임. “식품안전체계의 현실과 비전.” 『농업전망 200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5.
- 최지현·이계임·김철민·김민정. 『선진국의 식품안전관리체계와 국내도입방안』. 연구보고 47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4.
- 최지현·이계임. 『주요 농축산물 안전성의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보고42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1.

식품소비 및 영양정책의 평가와 과제

- 김성용 (경상대학교 교수)

1. 기본개요 및 특징	67
2. 주요 선진국별 식품소비 및 영양보조정책	68
3. 시사점	78

식품소비 및 영양정책의 평가와 과제

1. 기본개요 및 특징

- 서구 선진국에서는 국민에게 적절하고 균형 있는 양질의 식품을 공급하고, 식생활 개선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홍보 및 교육이 정부주도로 추진되고 있음
 - 미국 농무성(US Department of Agriculture)의 식품보조 및 영양프로그램
 - 호주 보건성(Departmen of Health and Ageing)의 Eat Well Australia(과체중 및 비만 해소 정책)
 - 영국 환경식품농촌부(Department of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의 공공부문식품조달계획(PSFPI)
 - 영국 NHS(National Health System)의 과일채소 학교급식프로그램(SFVS)

- 이들 식품영양정책은 ①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홍보대책 ② 저소득가구의 노인 및 자녀를 대상으로 식품영양보조대책 ③ 공공부문의 식품조달정책 ④ 학교급식 정책의 형태로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음

- 이들 정책은 농업부처가 단독으로 추진하거나 아니면 농업-보건부처-교육부처 등 몇 개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등 국가별로 시행체제는 상이함

- 이들 식품영양대책은 국민 식생활개선 및 건강증진, 결식으로 인한 영양 결핍의 위험이 큰 노인 및 자녀들의 영양개선 등 직접적인 효과 이외에도 국내농산물의 소비 확대,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에 기여라는 간접적인 효과도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2. 주요 선진국별 식품소비 및 영양보조정책

2.1. 미국의 식품영양보조정책

- 미국의 식품영양보조정책은 국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이라는 목적하에 추진되고 있는 정책으로 농무성 예산(2007)의 43%를 차지할 만큼 매우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임
 - 미국 식품영양보조정책의 3대 목표: 영양 높은 식품에 대한 접근성 확보, 건강한 식습관 및 생활양식 증진, 영양보조정책 운영 및 수급자 서비스의 개선
- 식품영양보조정책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고 있으나, 저소득층에 대한 식품보조와 일반국민들에 대한 영양교육, 그리고 식생활에 대한 조사연구 등으로 구분됨
- 식품영양보조를 위한 세부프로그램은 정책대상에 따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나뉨
 - 일반인 대상: 영양교육 및 홍보(Nutrition Education & Training)
 - 학교 급식: School Lunch
 - 저소득층 일반계층: Food Stamp
 - 저소득 특정계층: WIC(임산부), CSFP(노인 및 어린이), Child & Adult Care Food Program(노인 및 어린이)

표 1. 미국 농무성의 부서/정책별 예산지출 내역

단위: 백만불

부서/정책	2006년	2007년(계획)
Food Service Agency	36,797	33,891
Risk Management Agency	4,048	4,243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46,206	43,403
Rural Development	18,102	14,406
Food and Nutrition Service	53,862 (40.5%)	54,444 (43.3%)
Natural Resource and Environment	8,339	7,719
Food Safety	952	987
Marketing and Regulation Programs	2,191	1,731
Research, Education, and Economics	2,709	2,309
Other Activities		
USDA Total	132,954	125,610

표 2. 미국 식품보조 및 영양정책의 종류와 지원대상

	가구	임산부	영아	어린이	노인
Food Stamp Program	√	√	√	√	√
National School Lunch Program				√	
WIC		√	√	√	
Child and Adult Care Food Program			√	√	√
School Breakfast Program				√	
Summer Food Service Program				√	
Emergency Food Assistance Program	√				
Nutrition Program for the Elderly					√
Commodity Distribution to Charitable Institutions	√				
Commodity Supplemental Food Program-WIC/Elderly		√	√	√	√
Food Distribution Program on Indian Reservations	√				
Special Milk Program				√	
Nutrition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				√	
WIC Farmers Market and Nutrition Program		√	√	√	

- 식품보조 및 영양정책 수단은 프로그램 마다 상이하여 현금지급, 식품구입에 용도를 제한한 쿠폰(voucher) 지급, 필수식품제공 형태로 급여가 지급됨
 - 거의 모든 영양보조프로그램에서 식품에 대한 영양정보 제공이나 영양교육 등이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음

표 3. 미국 식품보조 및 영양정책의 지원방식

	식비 현금 지급	식품 구입용 쿠폰 지급	식품 구입 현금 지급	필수 식품 제공	영양 정보 제공 및 교육
Food Stamp Program		√			√
National School Lunch Program	√			√	√
WIC		√			√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		
Child and Adult Care Food Program	√			√	√
School Breakfast Program	√			√	√
Summer Food Service Program	√			√	
Emergency Food Assistance Program				√	
Nutrition Program for the Elderly	√			√	
Commodity Distribution to Charitable Institutions				√	
Commodity Supplemental Food Program(CSFP)-WIC/Elderly				√	√
Food Distribution Program on Indian Reservations(FDPIR)				√	√
Special Milk Program	√				
Nutrition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					√
WIC Farmers Market and Nutrition Program		√			√

- 식품영양대책 가운데 수급자수와 수급자 1인당 보조액 측면에서 가장 규모가 큰 프로그램은 푸드스탬프(Food Stamp)임
 - 미국인 15명당 1명이 그 혜택을 받고 있다는 측면에서 중추적인 영양안전망(National Nutrition Safety) 역할을 수행.
 - 푸드스탬프의 수급자수 연간 260만 명에 달하며
 - 1인당 월보조액은 약 88천원(93달러)에 달함

- 그 다음으로 규모가 큰 식품영양보조프로그램은 학교급식(school lunch)으로 그 수급자는 연간 3백만명에 달함

- 미국의 식품보조 및 영양정책은 ① 식품소비의 확대 ② 영양상태 개선 ③ 빈곤경감 및 사회안전망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미국 내 많은 연구결과들이 평가하고 있음

표 4. 미국 식품영양정책별 수급자수 및 보조액

	2005(실적)	2006(추정치)	2007(계획치)
수급자수(백만명)			
Food Stamps	25.7	26.9	25.9
School Lunch	29.6	30.2	30.9
School Breakfast	9.3	9.8	10.3
WIC	8.0	8.2	8.2
CSFP:WIC	0.05	0.05	0.0
CSFP: Elderly	0.47	0.42	0.0
FDPIR	0.10	0.10	0.10
수급자 1인당 월 보조액(\$)			
Food Stamps	92.70	93.79	96.95
WIC	37.55	38.38	39.30
CSFP: WIC	16.66	22.07	0.0
CSFP: Elderly	12.71	14.26	0.0
FDPIR	40.69	40.28	41.66

- 식품소비확대효과: 식품보조를 위한 급여액이 용도를 식품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현금소득에 비해 식품에 대한 한계소비성향이 다소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식품에 대한 현금소득 1달러의 한계소비성향: 5~13센트
 - 식품에 대한 보조액 1달러의 한계소비성향: 17~34센트
 - 영양개선효과: 미국의 식품소비조사연구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식생활이 1965~1966년, 1977~1978년 크게 개선되었는데 이 시기는 식품보조 및 영양공급프로그램이 미국 전역으로 확대된 시기임.
 - 미국 식생활지침(Food Guide Pyramid)이 정한 5가지 식품군 중 3가지 식품의 권장소비량에 대한 섭취률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빈곤경감 및 사회안전망효과: 저소득층에 식품구매력을 제공함으로써 식품소비를 늘리고 저소득층로 하여금 적절한 영양수준을 유지케 하는 영양안전망(nutrition safety net) 역할을 수행.
 - ※ 특히, 푸드스탬프의 경우, 보조액 수준이 저소득가구의 전체 구매력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이며, 보조액이나 수급자수가 한 해의 경제수준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결정되어 경기침체로 인한 실업자 증가시 다른 공공부조 보다 빈곤경감이나 생계보호의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음
- 저소득층에 대한 영양보조프로그램은 저소득층에 대한 적정식품 확보(Food Security) 측면에서 시행되고 있음
- 적정식품 확보(Food Security): 건강한 삶을 위해 필요한 식품을 충분한 양 만큼 항상 구매가 가능한 상태를 말함
 - Food insecure는 건강한 삶의 유지에 필요한 식품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는 상태로 미국 인구의 11%인 1,260만명이 이에 해당
 - Low food security는 다양한 식품의 섭취에 제약이 있는 상태로 미국인구의 7.1%인 820만명이 이에 해당
 - Very low food security: 가족 구성원 중 적어도 한 명이상이 정상적인 식품 섭취에 제약을 받는 상태로 미국인구 3.9%에 해당하는 440만명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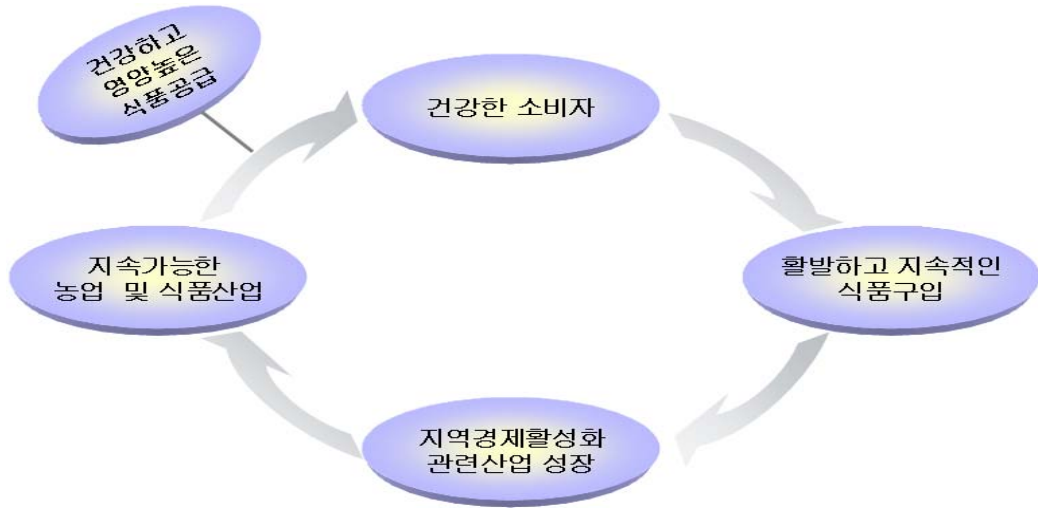
이 부류에 속함.

- 미국 농무부는 식품영양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수급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수급자의 영양섭취 상태를 자세하게 분석하기 위해 1990년부터 「개인별 식품섭취량에 대한 전국조사」(Continuing Survey for Food Intakes by Individuals)를 실시하고 있음

2.2. 영국의 공공부문식품조달계획

- 영국 환경식품농촌부(DEFRA)은 2003년 8월 공공부문 식품조달계획(Public Sector Food Procurement Initiative: PSFPI)를 시행하고 있음. PSFPI는 DEFRA의 지속가능한 농업 및 식품산업 전략(Sustainable Farming and Food Strategy: SFFS)의 일환으로 추진
 - SFFS는 산업, 정부, 소비자가 협력하여 지속가능하며 세계적 수준의 농업과 식품산업을 수립하여 더 나은 환경과 번영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전략을 말함
 - 공공부문의 식품구매 및 급식에 사용되는 지출액은 연간 20억파운드(3.8조원)에 달하는데 이 구매력을 이용하여 지속가능한 농업과 식품산업 전략을 위해 활용함.
- PSFPI의 목적은 공공부문의 식품구매자가 농민, 재배업자, 공급업자와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식품이 병원, 학교, 감옥 및 공공기관내 구내식당에서 더 많이 소비되도록 하는데 있음.
 - PSFPI의 5 가지 추진목표:
 - ① 식품의 생산 및 가공 기준 개선
 - ② 지역생산자로부터의 농산물 구매 확대
 - ③ 건강식이며 영양 높은 식품의 소비 증대

그림 1. PSFPI의 기본 개념



- ④ 식품 생산과 공급의 환경적 악영향 축소
- ⑤ 지역의 소규모식품공급자가 수요를 충족시킬 수는 역량 강화

- 영국 환경식품농촌부가 PSFPI로부터 기대하는 효과는 다음과 같음
 - 지속가능한 영국 농촌지역경제
 - 경쟁력 있는 중소규모 식품공급업체
 - 보다 건강하고 활기찬 학생과 노동자
 - 병원 입원일수의 축소
 - 지속가능한 환경
 - 동물복지
 - 소수인종 및 종교집단의 식품선택권 확대
 - 쓰레기 감량에 기여
 - 지속가능한 조달
- 식품조달계획에는 균형 잡힌 식생활의 수단으로 건강식이며 영양 높은 식품(good food)을 크게 강조하고 있음

- 균형식단: 다양한 식품을 섭취하되, 설탕·지방·소금은 적게 섭취하고, 과일과 채소는 가능한 한 많이, 감자 및 곡류 등도 많이 섭취함을 의미
- PSFPI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타부처의 실천계획(Action Plan)과 공조체 제하에 추진되고 있음
 - NHS, 국방부, 감옥, 기타 공공기관에서 공급되는 모든 식품에 대한 영양 기준 강화
 - 국가보건체계(National Health System)의 식품건강실천계획: **Choosing a Better Diet**
 - 교육훈련부(Department of Education and Skills)의 학교급식 개선 프로그램: **5 A DAY Program(SFVS)**
 - 병원급식개선프로그램(Better Hospital Food Programs)
- PSFPI는 국민에게 영양 높은 식품의 공급을 통한 국민건강증진이라는 효과이외에 식품소비확대로 인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 국가발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음.

2.3. 영국의 과일채소 학교급식프로그램

- 영국은 2000년에 도입된 NHS(National Health System) 계획의 일환으로 4-6세의 취학 어린이에게 영국산 과일, 채소 소비량 증대를 목표로 학교 과일 및 채소공급 프로그램(School Fruit and Vegetable Scheme: SFVS)을 시행하고 있음.
 - 이 프로그램은 암이나 고혈압 예방을 위해 일정량 이상의 과일과 채소의 섭취가 요구됨
 - 과일, 채소의 섭취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어릴 적부터 과일과 채소에 대한 섭취 습관을 길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추진

- 이 과일채소 급식 프로그램은 환경식품농촌부의 공공부문식품조달계획과 협력하에 이루어지고 있음.
- 매일 200톤, 매년 4만톤의 신선한 과일과 채소가 NHS의 조달청 (Purchasing and Supply Agency)에 의해 공급되고 있음
 - 과일과 채소의 구입은 공급업체와 계약을 맺어 이루어지고 있으며
 - 농산물의 공급은 영국의 9개 지역으로 구분되어 인증된 업체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공급되는 농산물은 안전해야 하며 통합작물경영시스템 (Integrated crop management system)하에 재배된 것이어야 함.
 - 각 지역마다 매일 20~30만명의 어린이들에게 과일과 채소가 공급
- 취학아동의 선호 및 식경험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과일과 채소가 공급되고 있는데 주종은 사과, 바나나, 당근, 방울토마토, 배, 감귤류, 딸기 등임.
 - 향후 키위와 오이도 공급할 계획임
- 이 프로그램에 대한 수급자와 이해당사자들의 평가는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 참여학교의 99%가 과일 공급자가 매우 신뢰하거나 신뢰할 수 있다고 평가
 - 참여학교의 93%가 급식되는 제공되는 과일의 품질이 좋은 것으로 평가
 - 학교 아동의 대다수가 이 계획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 학교 교사의 99%가 이 계획이 아동들의 건강을 증진시켰다고 평가
 - 참여학교의 97%가 이 계획이 아동들에게 건강한 식습관을 교육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
 - 참여학교의 55%가 이 계획으로 인해 수업분위기가 향상되었다고 평가
 - 아동의 25%이상이 계획에 참여한 후에 방과 후 과일 소비가 이전 보다 늘었다고 평가
 - 학부모의 96%가 자녀들이 학교에서 급식으로 제공되었던 과일은 학교 밖의 장소에서도 항상 먹거나 아니면 자주 먹게 되었다고 평가

2.4. 호주의 국민건강영양정책

- 호주는 National Public Health Partnership의 일환으로 「국민건강을 위한 영양대책 및 실천계획에 관한 10개년 계획(Nutrition Strategy and Action Plan- Eat Well Australia, 2000-2010)」을 수립, 시행하고 있음
- 이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과체중 및 비만 예방(prevention of overweight and obesity)
 - 과일, 채소의 소비량 증대(increasing the consumption of vegetables and fruits)
 - 여성, 유아 및 아동의 영양 개선(promoting of optimal nutrition for women, infants, and child)
 - 영양취약계층에 대한 영양공급 확대(improving nutrition for vulnerable groups)
- 호주는 이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전략적 사업경영(strategic management), 연구개발(research and development), 정보교환(communication), 사후관리 및 평가(monitors and evaluation), 관련인적자원개발(workforce development) 등을 정책개발 및 운영과정에 도입, 추진하고 있음
- 미국, 영국과는 달리 보건성 독자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2.5. 식품소비 모니터링 및 영양교육홍보정책

- 미국 등에서는 식품영양정책의 정책효과를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식품섭취량 조사, 정책수혜자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 및 감시, 영양프로그램의 평가, 영양교육 및 홍보 등에 대해 연간 1억 6천만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고 있음.

- 식품영양정책이 모니터링을 위해 농무성내에 별도의 기관인 Office of Analysis, Nutrition, and Evaluation (OANE)을 두고 있으며, 미국인의 식품영양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프로그램인 FANRP(Food Assistance and Nutrition Research Program)이 매년 시행되고 있으며, 식품모니터링을 통해 국가 영양데이터베이스(National Nutrient Database)가 구축되고 있음
 - 농무성의 농업연구청(Agricultural Research Service)에서 식품영양조사 실시

- 영국의 경우 공공부문식품조달계획의 효과를 감시하고 평가하기 위해 식품소비 및 영양상태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의 실시와 함께 관련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고 있음
 - 식품소비 및 영양섭취 모니터링내용: 모유수유율, 과일채소 섭취량, 식이섬유 섭취량, 소금섭취량, 총지방 및 포화지방섭취량, 설탕 섭취량 등
 - 식품소비 및 영양정보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사례
 - DH(Department of Health)/FSA(Food Standard Agency)의 National Diet and Nutrition Survey
 - DEFRA의 Expenditure and Food Survey
 - DH의 Health Survey for England

3. 시사점

- 선진국의 사례를 검토하여 볼 때 21세기 농정당국은 국민에게 건강식이며 영양 높은 농식품을 공급함으로써 소비자의 건강한 식생활을 책임지는 식품영양정책에도 관심을 가져야 함

- 농정당국의 식품영양정책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식생활에 관한 홍보 및 교육 뿐만아니라 저소득 취약계층의 결식 노인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영양지원프로그램도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식품영양정책으로 보다 건강해진 소비자들의 국내농산물에 대한 보다 왕성하고 지속적인 구매로 인해 궁극적으로는 지속가능한 농업 및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것임.
 - 이러한 측면에서 농정당국이 주도하는 식품영양정책은 사회의 두 취약 계층인 농민과 저소득층 소비자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임.

- 국가마다 식품영양정책의 행정체계가 상이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장단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나 재원조달 및 시행 측면에서 범부처간 공조체제를 기반으로 한 식품영양정책 추진이 바람직함
 - 농림부와 보건복지부, 교육부간에 서로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재원조달구조도 일부 부처에서 여러 부처로 다각화하는 방안을 고려

- 식품영양정책의 추진 방식은 식품의 조달 및 공급방식, 지역 공급업체와의 연계 등의 측면에서 국내 농식품에 대한 소비 확대 효과를 유발시킴으로써 지속적인 농업 및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함
 - 영국의 공공부문식품조달계획(PSFPI), Local Food for Bradford Schools 등이 좋은 예임
 - 우리나라의 경우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한 학교급식은 아동의 식습관 형성과 건강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농산물을 정부조달로 구매하여 농촌도 살리고 친환경농업 확대에도 기여

- 식품영양정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특히, 저소득가구의 식품소비 및 영양상태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전국조사를 통한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필요함

종합 토론

○ 종합토론

- 사회자: 박성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토론자: 전한영 (농림부 소비안전과 사무관)
장남수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김병조 (식품외식경제신문 편집장)
김태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허윤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초빙연구원)

종합 토론

□ 장남수(이화여자대학교)

지금까지 우리나라에는 제대로 된 영양정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진국의 여러 정책들에 대해 연구한 결과를 통해 국민영양기본법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식품영양을 담당하는 전담부서가 없고 여러 부처에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영양정책은 훨씬 더 분산되어 있어 문제가 심각합니다.

현행 영양정책에는 국민을 영양적으로 보호한다거나 소비자의 건강을 위해 영양있는 식품을 제공한다는 철학이 없습니다. 또한 영양교육, 홍보에 관한 내용도 없으며 규제 위주인 식품위생법을 통해 오히려 식품산업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은 농무성이 주도하여 식품영양교육, 영양, 식품지원에 많은 비중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식품과 관련되는 모든 정책에는 교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에게 항상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를 교육하고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학교급식은 교육부가, 식품보조정책은 보건복지부가 시행함으로써 이 부분에서 농림부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식품의 안전성에는 위생적인 안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영양의 개념까지 포함시켜야 합니다. 또한 선진국들은 소비자보호를 위해 과체중과 비만, 여러 가지 만성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영양대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농림부에서는 이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빨리 파악해서 생산자가 소비자들이 원하는 제품을 만들뿐만 아니라 우리 농산물이 건강 증진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널리 교육하여 생산할 수 있으면 대한민국의 농업의 앞날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병조(식품의식경제신문)

식품 정책은 식품안전정책, 영양정책, 산업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식품정책에 가장 큰 문제점은 정책에 불균형에 있었다고 봅니다. 지나치게 안정관리 정책에 있어왔고 사실은 산업육성정책이나 영양정책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식품산업육성정책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그동안 정책이 규제 위주로만 되어왔고 산업육성은 소홀해 왔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논리는 식품산업의 경우는 소비자가 기대하는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산업진흥을 유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규제를 아무리 강화해도 그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영세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상은 규제가 효과적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급급한 영세업체가 대부분인 상황에서는 그 법을 스스로 지킬 도덕성도 능력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범법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식품산업을 선진화시키고 육성해야 합니다.

또한 식품산업은 미래 성장유망산업입니다. 식품산업은 최근에 바이오테크놀로지와 융합이 됨으로써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산업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식품 산업정책은 육성정책이 전혀 없다보니까 업체들이 자생적으로 지금까지 시장규모를 키워왔는데 갈수록 국제 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행 시장여건에서 업체들이 R&D에 투자할 능력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기초적인 기술은 정부에서 지원해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미미

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미래를 보거나 국제적인 추세로 봤을 때 식품산업은 유망산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육성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식품제조가공뿐 아니라 외식산업까지 포함하는 식품산업은 농산물의 대량 수요처입니다. 예전에는 가게가 직접 농산물을 구매를 해서 소비를 했지만 이제는 가공 산업이 발달하고 외식 경향이 강해지면서 도시근로자 가구들의 식료품비 소비지출 중에서 가공식품과 외식산업, 특히 외식산업 지출비용이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외식시장에서 농산물 생산자는 마케팅을 해야 될 고객이 식품업체와 외식업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농산물의 대량 수요처를 발굴한다는 차원에서도 식품산업을 육성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입식품이 물밀 듯이 들어오고 가격경쟁력이 갈수록 벌어지는 상황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식량 안보문제까지 확대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정부는 식품산업을 농업과 연계해서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야 됩니다.

현행 농식품정책의 단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습니다. 첫째, 주무부처도 없고 8개 부처로 분산되어 있으며 중앙부처와 지방부처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식품산업진흥법을 만들기 위해서 농림부에서 애쓰고 있지만 진행이 체계적이거나 계획적이지 못하고 중구난방식으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식품안전문제에서 가장 큰 이슈는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두속 사건과 기생충알 김치파동과 같은 사건에 대해 정부가 전문성 없이 결과물 발표함으로써 소비자의 불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는 과잉보도를 하는 언론과 과민반응을 하는 소비자보다 미숙하게 대처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식품안전과 관련된 보도나 발표를 할 때에는

공식적으로 정부나 전문기관으로부터 사전 검증절차를 밟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전문제와 관련되어 대중음식점 문제도 심각합니다. 현재 대중음식점, 외식업소의 안전문제가 등한시되고 있는데, HACCP나 GAP가 제대로 적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자율위생관리 프로그램입니다. 일본 동경에서는 유명 외식업소에서 이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식품위생에 대해 스스로 체크를 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업소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요식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꾸는 것입니다.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꾸면서 허가 기준에 대형 음식점 또는 기업형 음식점 같은 경우는 자율 위생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일반 생계형 가게라 할지라도 최소한의 시설기준 위생관리기준 같은 것을 정해서 적합한 업체만 업소만 허가를 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현재 국산 농산물을 대량으로, 어느 정도까지 소비시킬수 있는 곳이 공공부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특히 학교급식이 만개 이상 학교에서 10만 명 정도의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식재료 공급규모는 매우 크다고 생각됩니다. 비단 농산물 수요처뿐만 아니라 영양까지도 고려해서 교육부 차원만이 아니라 범부처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학교급식위원회를 총리실 산하에 주무부처로 설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전환영(농림부)

부처 간 이견과 관련해서 2006년 3월부터 식품안전처를 설치한다는 얘기 나오면서 식품 업무를 이원화하고 산업육성기능을 따로 분리를 하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식품안전처를 신설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림부에서 식품산업진흥법을 만들겠다는 것에 대해서 부

처 간 이견이 있어왔습니다. 얼마 전 총리주재 회의에서 식품농업농촌기본법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다만, 식품안전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시간이 걸리기는 하겠지만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농림부 정책이 농업인 위주로만 진행된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일견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업인이라는 특수하고 취약한 집단을 상대로 하기 농림부는 우선적으로 정책을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2004년에 농업농촌종합대책을 기준으로 농림부 내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농촌관련 정책들을 다른 부처에서 이관함으로써 농촌정책부분의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림부에서는 생산일방적인 정책이 아니라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푸드시스템적인 관점에서 소비자의 수요에 맞는 품종개량, 일괄관리 등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잉여농산물에 대한 부가가치 창출 측면에서도 식품가공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농림부가 식품산업진흥법을 위주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산업이 발전하기 위한 기초 인프라 구축, 인프라 운영방안, 그리고 식품품질관련 제도의 도입입니다. 기초 인프라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R&D입니다. 현재 식품분야 R&D에 투자되는 비율은 0.4%로 일본의 3.0%보다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BT, 나노기술 등을 이용한 적극적인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인력문제에서도 위생법 상에 조리사, 영양사 이외에도 민간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분야의 자격증이 앞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된 전문 인력도 충분히 양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농림부가 식품산업을 육성하는 이유 중에서는 우리 농산물의 수요처

확보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식품산업진흥법에는 직거래나 수직적 거래 등 다양한 거래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 생산자와 수요자, 특히 식품외식업자 간에 정기적인 교류행사나 정보교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정보가 쌓이게 되면 DB화하여 온라인상에서 직거래가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제도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가령 시장에서 유기식품 품질인증이라던가 전통식품 품질인증과 같이 우수한 식재료를 인증하고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식품이 가지는 효능에 대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식품영양과 관련해서 그동안 농림부가 식품영양에 무관심했다는 지적 때문에 식품산업진흥법에 올바른 식습관 형성, 어린이, 청소년에 대한 식생활 교육 등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런데 영양정책은 보건복지부와의 견해 차이가 있어 의견을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정희(중앙대학교)

농식품과 관련된 법, 제도, 규정을 관리하는 주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농식품부분과 관련된 부처 간의 이견은 생산자와 소비자 관점에서 볼 때 가급적 일원화해야 합니다.

한편 소비자입장에서 수입농산물이 안전하고 ‘좋은’ 농산물이라고 인식되면 수입물량이 늘어나는 현상은 큰 문제가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좋은’ 농산물의 기준이나 특성을 발굴하여 우리 농식품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 박성재(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이 농정의 한 분야로 포함되는 과정에서 정당성이나 필요성이 국민에게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는다면 자칫 부처 간 이기주의로 인한 세력다툼으로 비취질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리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림부가 부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품을 포함하는 정책으로 전환하였다는 관점보다는 정책 전체의 발전이나 산업, 경제의 발전을 위해 전환했다는 필요성과 이것이 결과적으로 누구를 위해, 누구에 의해 관리되느냐에 대한 해답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지금의 소비트렌드는 웰빙의 영향으로 인해 소비자에 의한 차별화가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트렌드를 반영해서 소비자의 시그널을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소비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차별화전략이 필요합니다.

□ 최지현(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소비자에게 차별화된 상품으로 어필하기 위해 농림부에서 식품관련 위생문제, 영양문제, 안전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외식업체나 식품업체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자율위생관리 프로그램을 자비를 들여 시행하는 업체들이 시장 안에서 성공하는 경우가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 박성재(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농림부의 지원 위주의 정책은 자칫하면 시장을 혼란스럽게 할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이 있으면 시장이 왜곡되고 시장주체의 자율권을 빼앗는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보다는 시장주체가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마련하고 주체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정부가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 김병조(식품의식경제신문)

정책적 대응의 적극성이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중요한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식품위생과 관련한 법규를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페널티를 부과하는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 개선될 여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 박성재(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장시간 진지한 토론 감사합니다.

연구자료 D234-2

농식품정책의 선진화를 위한 과제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07. 12.

발 행 2007. 12.

발행인 최정섭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02-3299-4000 <http://www.krei.re.kr>

인 쇄 (주)문원사

02-739-3911~5 <http://www.munwonsa@chol.com>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